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치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위협론을 둘러싼 논쟁과
중국의 현실



2014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LIU HAIMEI

정 치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위협론을 둘러싼 논쟁과 중국의 현실

지도교수 이 정 호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LIU HAIMEI

LIU HAIMEI의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21일



주 심 정 치 학 박 사 이 대 희 (인)

위 원 정 치 학 박 사 이 성 봉 (인)

위 원 정 치 학 박 사 이 정 호 (인)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방법 및 구성.....	3
II. 중국위협론 대두의 배경.....	5
1. 미중국교정상화.....	5
2. 중국의 개혁개방시기.....	6
3. 탈냉전 이후 중국의 부상.....	8
III. 국제정치이론에 기초한 이론적 검토.....	16
1.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본 중국위협론.....	16
2. 자유주의의 시각에서 본 중국위협론.....	24
3. 구성주의의 시각에서 본 중국위협론.....	29
IV. 중국위협론에 대한 반론.....	33
1. 중국기회론.....	33
2. 중국붕괴론.....	39
3. 책임대국론.....	49
V. 중국위협론과 중국의 현실.....	54
1.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발전.....	54
2. 중국의 발전과 국내문제.....	64
3. 중국의 화평발전전략.....	70
VI. 결론.....	76
참고문헌.....	78

중국위협론을 둘러싼 논쟁과 중국의 현실

LIU HAI MEI

부 경 대 학 교 대학원 정 치 외 교 학 과

요 약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전망할 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로서 많은 학자들이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위협론과 관련된 논의로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중국위협론의 주장 배경과 그 논거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대 논거의 제시를 통해 중국위협론의 허구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공산권 몰락 이후 세계질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경제, 군사적 성장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연평균 10% 내외의 경제성장과 이를 기반으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총체적 국력에서 이미 미국 다음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했으며, 머지않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이 같은 급속한 성장에 대한 서방세계의 우려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서방세계와 중국 측의 상반된 주장들(중국기회론, 중국붕괴론, 책임대국론)을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검토하고, 이의 바탕 위에서 중국의 현실 -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문제들(소수민족문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문제), 그리고 중국의 화평발전의 전략도 함께 검토하면서 '중국위협론'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한다.

On the argument surrounding the China Threat Theory and the Chinese reality

Hai Mei Liu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ne of the most features of the post-Cold War order is the rapid growth of the economic and military power of China. In this dissertation, I will first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rise of China. It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China and U. S. A, the period of Reform and Opening-up of China, and the rise of China after the post-Cold War. In addition, I will focus on reviewing the China Threat Theory through the theory of the National politics. In other words, I will study the China Threat Theory specifically. After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about the argument of the China Threat Theory, it is argued by the Opportunity Theory of the China, the Collapse Theory of the China, and the Responsibility Theory of the China. Finally, the article will critically review conflicting arguments about the 'threat' of China upon objective facts, for example, the growth of the economic and military, the domestic issues and the peacefu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China. Against this background, I will make a conclusion that considering the China still has a lot of domestic problems, it doesn't have the enough ability to 'threat' other counties.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전망할 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로서 많은 학자들이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기존 패권국가와의 정면충돌을 불가피할 것이라는 ‘중국위협론’을 등장시켰다.

1972년 닉슨대통령의 중국방문과 상해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은 소련 견제라는 전략적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1989년 동구의 몰락과 1991년 소련의 해체 등으로 미국에 있어 소련 견제라는 중국의 전략적 효용가치가 감소된 반면, 1989년 천안문 사태 등으로 중국적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확산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90년대에도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21세기에는 중국이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식 강성대국론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중국위협론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위협론은 크게 경제적, 군사적 배경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 경제가 앞으로 지금과 같이 성장을 계속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란 일부 서방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 중국경제론을 촉발시킨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GNP는 개혁개방이후 계속 연평균 10%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왔으며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와 있고, 심지어 앞으로 대략 2030년을 전후해 미국을 추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¹⁾. 이처럼 중국

1) 이상현,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 안보지도: 중국 부상의 안보함의』 (세종연구소, 2011),

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고도성장의 경제력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군비 확충과 군 현대화를 추진하여 지역 강대국으로 등장하려는 것에 대한 경계심과 의구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전략가들과 정치인들이 중국의 군사대국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탈냉전 시대에 소련을 대신해서 전략적 상대 국가로서 중국의 위협을 다소 과장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중국의 군사비 증강 능력도 이들의 경계심을 촉발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면도 없지는 않다.

중국위협론은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와 군사력 발전에 직면하여 중국이 더 이상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세계의 강대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으며 정치력과 외교력도 동시에 강화하면서 강대국으로 면모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19세기에는 영국이, 20세기에는 미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했다면, 21세기에는 중국의 힘이 증대되는 시기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 이들은 또한 소련이 붕괴된 후의 탈 냉전기에 중국은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이론들은 중국의 표면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발전만을 가지고 중국을 위협요인으로 간주하다는 것이 매우 단편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위협론자들이 중국의 현실에 기초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며 평가해야 하고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력과 군사력발전, 그리고 중국이 안고 있는 많은 내부적인 문제들, 중국의 발전의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반대이론들은 중국이 위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런 논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맞다 혹은 틀리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위협론은 근거가 희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위협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주장들이 어느 쪽이 보다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위협론과 그의 반대이론들(중국기회론, 중국붕괴론, 책임대국론)를 균형 있게 연구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력과 군사력발전, 중국의 국내문제와 화평발전의 전략도 함께 검토하면서 중국의 최근 경제성장이 세계평화에 위협으로 작용할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구성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논문과 관련 문헌 등을 바탕으로 개혁개방 이후 제기된 '중국위협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중국위협론의 등장과 배경을 소개하고, 그중에서 '중국위협론'의 대두배경을 알아보는데 있어 '중국위협론'이 왜 나타났는지를 시기별로 설명할 것이고, 국제정치이론에 기초한 이론적 검토에 있어서 주로 현실주의의 세력균형이론, 세력전이론, 위협균형이론, 그리고 자유주의의 민주평화론, 구성주의이론 이 3가지 이론적 측면에서 '중국위협론'을 바라볼 것이고, 또한 중국위협론에 대한 기존연구에 있어 미국과 한국에서의 '중국위협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3장에서는 '중국위협론'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그의 반대이론들 - 중국의 성장이 전 세계에 위협이 아니라 기회를 가져왔다는 '중국기회론'과 중국의 각종 현안으로 중국정부는 기능이 마비되고 이로 인해 중국이 최종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중국붕괴론', 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이라고 주장하는 '책임대국론'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발전, 그 중에서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현재 중국이 국제사회에 위협적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또 중국이 안고 있는 소수민족, 빈부격차, 부정부패 문제들을 검토하고, 과연 중국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의 길로 나갈 것인가를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화평발전'의 전략을 제시하고, 중국의 발전과정 중에 과연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게 위협이 되는 발전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중국위협론 대두의 배경

중국위협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황화론(黃禍論)'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유럽인들의 의식 속에 내재해 있다는 황화론은 훈족의 유럽 침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여 유라시아 문명을 통합한 칭기즈칸 역시 유럽인들의 황색공포에 기여했을 것이다. 서구문명의 세계지배가 시작된 19세기 이후에도 유럽 지식인들은 아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틈만 나면 '황화론'을 상기시켰다. 서구열강이 중국을 침략할 때도 황화론을 깔고 있었으며, 일본과의 전쟁 및 전후 일본의 경제부흥기에도 황화론은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지난 90년대부터 황화론은 '중국위협론'으로 재생되고 있다²⁾. 이른바 중국위협론과 관련된 논의로서, 여기서는 시기별로(1972년 미중수교,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과 탈냉전이후 중국의 발전) 중국위협론의 대두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중국교정상화

널리 알려진 바대로 1950년 한국전쟁이후부터 1972년까지 중국과 미국 간의 대결구도는 소련-중국-북한의 북방 3자 동맹관계와 한국-미국-일본의 남방 3각 동맹관계의 대립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대결구도에서 중국은 1961년에 중국과 북한 양국 간의 우호동맹조약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특수 관계를 맺었고, 한국도 역시 미국과의 안보 동맹관계의 연장선에서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결구도는 중소분쟁이 격화되고, 1972년에 미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로 합의한 상해 공동성명을 계기로 개편되었다.

2) 중국광주지역정보가이드, <http://cafe.naver.com/qingbao/729> (검색일: 2013.11.17).

사실은 "1972년의 상해 공동성명은 베트남 전쟁이후 아시아 정세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1969년3월 중소 갈등이 마침내 진보도 유혈 무력충돌을 야기할 만큼 악화되면서, 소련의 '사회제국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중국 자신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월남전쟁의 종결이후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였다"³⁾. 이처럼 미중 양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합치되면서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訪中)과 상해 공동성명의 발표가 실현되었다.

1972년의 상해 공동성명에서 미중 양국은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영토주권의 존중 등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키는 것이 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이런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중국이 계속 주장해왔던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관점을 인정하고,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점진적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청산할 거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상해 공동성명의 내용은 한국전쟁 후에 미국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에서 배척해 왔던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요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중국의 영향력도 나날이 커져왔다.

2. 중국의 개혁개방시기

1978년12월에 덩샤오핑 정권이 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선언하고, 경제발전 우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고

3)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국제정치』 (2002), p. 17.

도성장을 계속하면서 덩샤오핑이 1980년대 초에 제기했던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的發展戰略)의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덩샤오핑을 비롯한 개혁지도자들은 "1980년대 초에 개혁개방을 주장하면서 1980년대 말까지 1980년 국민총생산액의 2배를 달성해서 모든 인민들이 배부르고 따스한 수준, 즉, 溫飽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1단계의 목표로 삼았고, 1990년대 말까지 다시 국민총생산액을 2배 이상 증대해서 국민들이 의식주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정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강(小康)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2단계의 발전의 목표로 설정했으며,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1인당 국민총생산량이 중진국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3단계의 목표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는데, 2001년은 1978년의 국민총생산액의 4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溫飽와 소강 수준에 도달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⁴⁾.

개혁개방 후에 중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의 성과는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총량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혁개방 이후 지난 20여 년간 중국이 이룩한 경제성장률을 보겠다. 중국은 "1979년부터 200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폭이 큰 경기순환을 보였고 지난 2003년에도 중국은 SARS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9.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GDP규모면에서는 세계 5위, 1인당 GDP는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하여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한편 세계무역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 중국의 상품수입은 달러 기준으로 40% 급증한 4128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2년의 세계 6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수출에 있어서는 35%늘어난 4384억 달러를 기록하여 프랑스를 제치고 전년 5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해외직접투자의 최대 유치국으로서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2003년(530억 달러)에는 실행기준 외자유치에 있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경제

4) 위의 글, p. 4.

침체와 동아시아의 경제 불황 그리고 9·11사태 등의 여파로 대다수 국가의 FDI가 감소세로 돌아선 뒤에도 세계자본은 여전히 중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중심이 미국에서 서서히 중국으로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⁵⁾.

이처럼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중국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농업국가에서 산업사회로 빠른 속도의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개발 도상국가이며, 계획경제에서 국가주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하고 있는 체제변환의 국가이며, 뿐만 아니라 무역의존도 비율도 크게 증가해서 중국은 더 이상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경제사회가 아니라, 세계경제와 접근해 상호의존성과 통합성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개방 지향적 경제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경제사회가 급속도로 개방화, 산업화, 시장화 되고,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중화문명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신감과 중국의 발전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동시에 일부 서방세계에서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탈냉전 이후 중국의 부상

공산권 붕괴라는 세계역사의 대사건이 벌어진지 20년이 지났지만 세계는 아직도 불확실성과 전환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 세계정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의 다양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세계 안보정세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인 변수중의 하나로 '중국'을 꼽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연평균 10% 내외의 경제성장과 이를 기반으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총체적인 국력에서 이미 미국 다음

5) 박병광,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미래상에 대한 평가,"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2)호 (2004), p. 145.

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했으며, 머지않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⁶⁾. 소위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이 같은 급속한 성장에 대한 기존패권 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한다. 이런 중국위협론은 경제와 군사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위협론을 촉발한 것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대국화에 대한 예측에서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을 실시한 후 연평균 9.8%라는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하였으며, <표1>에서 나타났듯이 세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기관인 Goldman Sachs에 의하면 중국의 GDP는 대략 2030년 전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장할 전망이다. 2050년에도 계속 세계1위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GDP수치를 보면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은 국가들로 성장했으며, 구매력 기준을 본다면 중국은 일본을 제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로 성장했다. 그 밖에도 현 추세대로 발전해 나간다면 향후 중국이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를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표1〉 세계 GDP 전망

순위	2007	2030	2050
1	미국	중국	중국
2	일본	미국	미국
3	독일	인도	인도
4	중국	일본	브라질
5	영국	브라질	러시아
6	프랑스	러시아	인도네시아

출처: Goldman Sachs, 2007.

6) 유종선, "중국위협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51집 (2009), p. 29.

사실은 경제적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의 주도적 역할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이었고, 중국경제가 일본경제를 추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이 지속되면서 중국경제의 추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1997년을 전후로 일본과 한국 등이 금융위기와 경제침체로 좌절과 후퇴를 경험하는 동안, 중국은 이른바 95기간(95期間 1996년-2000년)에 연평균 8.3%의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중국경제가 일본경제의 경쟁자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일본의 『2001년판 통상백서』가 바로 그런 경제적 차원에서의 중국 경제론을 반영하고 있다. 2001년까지만 해도 중국을 '동아시아 고도성장 국가 중 하나' 정도로 취급하던 일본이 2002년의 통상백서에서는 중국 형 성장 시스템의 구조와 현상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면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정보기기 산업, 일본의 독무대였던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급속히 경쟁력을 붙여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등장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⁷⁾". 뿐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이 G2국가로 부상되었고, 중국위협론을 더욱더 고조시켰다. 그 이후 〈표2〉에서 나타나듯이, 2009년에 미국과 중국의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다면, 미국은 24.9%, 중국은 8.3%로 추정되지만, 2030년에는 중국의 세계 GDP 점유율은 23.9%로 미국의 17%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부상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언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국가로 우뚝 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는 2030년을 기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세계 금융대란을 이겨낸 중국의 경제적인 저력과 대만을 비롯한 중화 경제권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발판으로 중국경제가 성장한다면 더 앞당기어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경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의 국제사회는 과거와 같은 군사적 경쟁으로 인한 패권경쟁이 아니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패권의 시대

7) 서진영 (2002), p. 7.

로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굴기는 경제패권의 시대로 매진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들에게 경제 대상 1호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

〈표2〉 국가별 GDP 점유율(%)

국 가	2009년	2030년
중 국	8.3	23.9
미 국	24.9	17.0
일 본	8.8	5.8
인 도	2.2	4.0
독 일	5.7	3.1
영 국	3.8	2.9
기타 아시아국가(중, 일 제외)	5.4	6.8
기 타	40.9	36.5

출처: 일본 내각부 자료, 『동아일보, 2010.05.31.』

이와 같이 30년 전에 중국은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이제 중국이 자본주의를 회생하고 구하는 시대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 경제의 변화는 세계경제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세계경제가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국들이 중국경제에 의해 먹고 사는 시대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인 동시에 세계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해서 안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개혁개방을 실시했을 당시만 해도 중국경제가 선진 국가들의 하청 공장에 불과한 수준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핵심으로 한 값싼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이었다.

8) 박광득, "굴기의 중국이 모색하는 변화와 한계," 『정치, 정보연구』 제14 (2)호 (2011), p. 139.

현재 중국은 스스로 개발하는 제조업으로 나아가고 있고 IT 등 산업의 스스로 개발로 업종을 전환하는 수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인한 중국시장의 확대 및 경제패권의 신장으로 중국 화폐인 위안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발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인 현재의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 무역에서의 결제 수단은 미국 달러가 위주가 되어 왔으나,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중화경제권이 결성되어 달러를 대신하여 위안화가 결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경제적인 확대와 성장으로 단순히 평가하기에는 중국의 경제규모는 너무 커져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초기에는 서구식 자본주의를 수용하여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현재는 중국의 경제적 규모와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식 자본주의라는 독자적인 측면을 구축하여 미국식 자본주의와의 한판 경쟁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1997년에 홍콩, 1999년에 마카오를 수복함으로써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세계최대이며 이러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의 자본을 매입하거나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방법으로 중국식 자본주의를 구축하여 가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금융대란이 발생하였을 때 선진국들이 주춤한 틈을 노려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 확보에 매진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경제력을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남미지역에까지 진출하여 자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자원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경제적인 저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선진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념적인 측면에 관계없이 실리만을 추구하는 경제부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⁹⁾".

9) 위의 글, pp. 139-140.

따라서 중국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 중국위협론의 주요한 배경으로서 언급되는 것이 군사안보적 요인에서의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이다. 사실은 탈냉전이후 중국위협론을 제기한 직접적인 계기는 1995년-1996년에 대만해협에서 발생한 군사적 긴장태세이었다. 대만 내에 독립 세력이 많아지고, 1995년 6월에 의회의 압력에 복종하여 미국정부가 대만의 총통인 리덩회이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자 중국은 1995년7월과 대만에서 총통선거를 했던 1996년3월에 대만을 겨냥한 미사일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중국위협론에서는 이 사건을 경제성장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회복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본격화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번스타인과 먼로(Bornstein and Munro, 1997)는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공식예산의 10배를 넘으며 이미 동북아에서 패권을 추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다"¹⁰⁾.

중국은 고도성장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군사 현대화와 군비 확충을 추정하여 지역 강대국으로 등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자이며 도전세력으로 인식되면서 중국의 군비증강과 경제발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실은 탈냉전시대에 미국사회에서는 중국을 미국의 최대 도전국가로 지목하면서, 21세기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동북아시아이며, 중국이 군사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위험성이 있다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의 2001년 방위백서도 중국의 미사일 현대화와 해군력 강화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위협론을 제기하였고, 일본의 유력한 야당인 자유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당수는 중국과 북한이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이며 중국이

10) 이남주, "미국에서 '중국위협론'의 부상과 변화," 『한중수교 10년 (2002)』, p. 350.

미국에 이어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군사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지나치게 군사력을 확충할 경우 일본이 핵무기를 제조, 중국의 군사력을 손쉽게 능가할 수 있다고 역설하여 과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¹¹⁾. 이처럼 미국과 일본의 전략가들과 정치인들이 중국의 군사대국화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는 배경에는 주로 탈냉전시대에 소련을 대신해서 전략적 경쟁 상대국가로서 중국의 위협을 다소 과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한 중국의 군사비 증강 노력도 이들의 경계심을 촉발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은 지난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공식 국방예산을 두 자리 숫자로 계속 증액시키고 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군사현대화와 군사력 증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표3〉 중국의 국방비 추세

(단위: 10억 달러)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방예산	20	25.7	29.8	33.6	38.5	46	60
최 저 추정치	45	50	59.6	70	85	97	105
최 고 추정치	65	70	89.4	105	125	139	150

자료: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ual Report to Congress.

실제로 전문가들 간에는 군인들의 낮은 임금, 경제 사업이나 무기 수출을 통한 군부의 독자수입, 국방비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기술 관련 R&D 투자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국방비는 저평가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실제 국방비가 공식발표보다 10배에 가깝다는 것

11) 오자와 이치로, 『读卖新闻』 (2001). (서진영 (2002), p. 10에서 재인용).

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7월에 미국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군사력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중국정부가 국방비를 약200억 달러로 발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세 배가 넘는 650억 달러에 달하며, 이 규모는 미국에 이어 2위라고 주장하여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Su-30 전투기, 핵잠수함, 중형 구축함 등 공군력과 해군력의 강화를 위한 최신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점과, 미사일 공격능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¹²⁾. 특히 2011년8월 중국의 항공모함 시험운항 소식이 기사화되면서, 미국 정부기관과 주요언론은 다양한 전망과 우려를 표시했다. 항공모함 보유가 가지는 군사적 상징성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장, 중국의 군사현대화 작업에 따르는 군사적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고되었다. 언론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제조명하며 2000년대 후반 이후에 다소 잠잠해졌던 중국위협론의 화두가 다시 등장했고, 미국국방부의 2011년 국회 연례보고서에서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점점 더 많은 영향력과 책임을 지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을 우려하였다¹³⁾.

12) 이남주 (2002), p. 350.

13) 김유리, "미국 내 중국연구의 변화를 통해 본 중국위협론 논의의 재고찰," 『동아연구』 (2012), p. 50.

Ⅲ. 국제정치이론에 기초한 이론적 검토

국제정치이론에 있어 현실주의의 세력균형이론, 세력전이론, 위협균형이론, 그리고 자유주의의 민주평화론, 구성주의이론으로 중국위협론을 바라보고자 한다.

1.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본 중국위협론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인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에 따르면, 국제정치는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세력배분' 현상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특히, 국가 간 세력균형이 붕괴되면 전쟁이 일어나기 쉬우며, 따라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 간 세력균형을 깨지는 국가를 타국들이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력균형론에서 '세력균형'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명확치 않으나, 이는 때로는 법칙에 가까운 경험적인 현상을 또는 근대국제정치의 원칙이자 관행을, 어떠한 경우에는 국가들의 정책 목표를 뜻하기도 한다. 체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세력균형론은 무정부 상태의 국가가 편승(bandwagoning)보다는 균형(balancing)을 통해 안정을 모색한다고 보며, 국제관계사에서 한 국가의 압도적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반 패권 동맹의 등장을 그 예로 들고 있다"¹⁴⁾. 다시 말해 세력균형에 대한 여러 의미들 가운데 핵심은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들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게 군사력이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국가안보가 증진된다는 아이디어이다.

세력균형이론은 만약 한 국가가 압도적인 힘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나라는 자신의 힘의 이점을 이용하여 약한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려 할 것이고, 그리하여 위협을 받는 국가들이 방어적 성격의 동맹을 맺어 단결하

14) 신옥희, "미중일 관계의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통합적 이론으로서 위협균형/위협전이론," 『아시아리뷰』 제2권 제(1)호 (2012), p. 12.

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위협을 받는 국가들의 군사력이 팽창주의 야심을 품은 국가를 억지(혹은 필요한 경우) 분쇄하게 된다¹⁵⁾.

세력균형론자인 월츠(Waltz, 1967)는 기본적으로 다극체제보다 양극체제가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미중, 혹은 미일 간의 세력이 비슷해지면 국제체제/지역체제의 안정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¹⁶⁾. 세력균형론의 시각에서 미중 관계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로스(Ross, 1999)는 탈냉전기의 아시아를 기본적으로 양극체제로 규정하고, "해양국가/해군중심의 미국과 대륙국가/육군중심의 중국이 병립하는 지정학적 안정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¹⁷⁾. 즉 힘을 미국이나 중국 두 나라 어느 쪽으로 기울이더라도 세계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냉전기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동아시아지역에서 강대국 간 혹은 지역 내 세력균형을 붕괴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국 세력균형 정책을 통해 국제정치의 불안정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¹⁸⁾.

대외정책과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위협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과 1996년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미사일 실험, 미국의 항공모함 파견 등 군사적인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미국 저널리스트인 크라우트해머(Krauthammer, 1995)가 기고문 '우리는 왜 반드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느냐(Why we must contain China)' 중에서 중국의 급속한 팽창에 대응하는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을 비롯하여, 정책연구소, 언론, 기업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적극적 정책을 주문하였고, 인권이나 민주화 등의 가치를 내세워 중국에 압박을 가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와 중국내 학자들의 반발을 샀고, 그간의 발전 방향에 따라 각 분야별로 연구를 진행하던 미국

15) 찰스 W. 케글리, Jr./오영달, 조한승, 황기식 옮김, 『세계정치론, 경향과 변화』 (서울: 한티미디어, 2010), p. 607.

16) 신옥희 (2012), p. 12.

17) 위의 글, p. 12.

18) 김태호, 『중국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나남, 2008), pp. 32-33.

내 중국연구자들로부터도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중국이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중국 위협론 논쟁은 1990년대 중반이라 하더라도,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의 위협(China Threat)이라는 표현은 종종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과거 일본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의한 시장 잠식 우려를 표현했던 정도의 의미로, 중국의 경제적 규모나 성장속도, 비민주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¹⁹⁾.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존 학계의 중국연구자들보다는 주로 안보 및 군사 관련 정책연구소나 언론에서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번스타인과 먼로(Bernstein and Munro)의 미국과의 다가올 충돌(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를 꼽을 수 있다. 1997년 국제정치저널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의 기고문과 동명의 단행본이 출간되었는데, 타임(Time)지의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평론가 및 정책연구소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저자들의 정보에 근거하여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역사상 누리던 아시아의 주도권을 회복하려 하고, 이는 아시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국가도 아닌 중국이 아시아에서 경제 발전과 함께 안보적 자신감도 갖추고, 특히 대만을 비롯한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위협하게 되었으며, 테러국에 대한 핵무기 기술 유출이나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이 지속되면서 중국과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중국위협론은 보수 언론 및 안보연구소를 중심으로 유연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되었다²⁰⁾.

또한 강명세²¹⁾가 지은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의 재정립"에서 중국이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중국은 적어도 동아시아에

19) 김유리 (2012), p. 61.

20) 위의글, p. 62.

21) 강명세,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질서의 재정립," 『세종정책연구』 (2012), p. 36.

서는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세계모니를 장악할 것이다. 향후 20-30년 동안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라이벌로서 역사상 전례가 없는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미국에게 불리한 점은 중국은 미국이 상대하는 국가 가운데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보다 큰 거인이라는 상황이다. 영국과 소련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었다. 나아가 중국은 냉전의 러시아와는 달리 더 이상 고립적이지 않고 교역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투자 적이라는 점이 미국과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유리한 상황도 발생한다. 주변국이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는 점이다.

미국은 위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세계전략을 수립하려 한다. 그럴 경우 한국 역시 미국의 변화하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과거와 달리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가능한 한 무임승차를 통해 세계패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만약 미국이 월트의 제안처럼 축소하는 국력으로 인해 선택적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한미동맹을 고집하는 전략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전략적 이해를 갖는 일본과 러시아는 향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강대국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북한 핵을 둘러싼 '6자회담'의 진행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국은 팽창하는 경제력과 국부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동아시아의 강국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다.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그러나 국부의 증가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평화적 부상은 경제적 부흥에 전념하여 미국수준에 근접하는 동안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력을 능가하고 군사력에서도 미국과 힘을 겨룰 수 있는 단계에 온다면 중국의 전략은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국부 역시 정체하지 않고 증가할 것이지만 중국의 속도와 규모는 미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현실주의이론인 세력전이이론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의 정치학교수인 오르간스키(A·F·K Organski, 1968)가 처음 제기되었다. 오르간스키에 의하면 전쟁은 기존의 지배국가와 성장 강대국가간의 지배권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세력전이'라고 그는 언급하고 있다. 이 이론의 전제는 국제정치 사회는 위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계아래에서 최상층에는 국제체계의 질서를 만들면서 안정적 체계를 유지하는 지배국가(Dominant state)가 존재하며, 그 아래에는 이를 지지하는 여러 강대국들이 있다. 이러한 강대국들은 지배국가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으면서 현상유지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배국가의 지지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본질이 자조와 능력의 보유가 가능하다면 각 국가는 스스로 더 많은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최상층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패권의 보유를 위한 반복적인 분쟁이 발생되며, 이것이 국제질서의 본모습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²²⁾. 세력전이론에 따르면, "국가들간의 성장속도 차이로 인한 국력의 재분포가 일어나서 도전 국이 패권국의 국력을 따라잡는 세력전이가 일어날 때 체제적으로 가장 불안하다. 게다가 도전 국이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족국가이면 전쟁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²³⁾.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세력전이론자인 김우상은 세력전이론을 통한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분석에 대해 중국과 같이 급성장하는 불만족 국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등장할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전이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이야기하였다. 미국의 세력전이론자인 타먼과 키클러(Tammen and Kugler, 2006)도 미국에 대한 커다란 도전은 테러리즘이나 지역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력이 증대되는 중국과의 장기적인 이익의 충돌에 놓여있다

22) 이경훈, "중국위협론의 타당성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헤게모니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8), p. 11.

23) 우철구, 박건영,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6), p. 137.

고 지적하면서,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미중 간의 세력전이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²⁴⁾ 있으며 중국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미중 간의 세력전이 여부 자체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보거나, 이과정의 갈등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즉 중국위협론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하나의 예로 첸(Chan, 2005)은 "중국이 국력의 전통적인 척도에 있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을 담보하는 기술과 인적자원의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²⁵⁾고 주장한다. 워싱턴 타임즈(The Washington Times)의 기어츠(Gertz, 2000)는 중국위협(The China Threat)에서 중국의 점진적 변화를 기대한 것이 실수였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국내사회를 억누르고 대외 팽창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용했다고 주장하였다. "군사 기술 유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유출, 대만에 대한 위협 등을 제시하면서 태평양 지역 안보는 물론 핵전쟁의 위협도 있다고 보았으며, 중국 지도층이 미국을 속이고 미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위협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다"²⁶⁾고 비판하였다.

군사전문가로서 중국위협론을 주장하며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던 경우로 팀퍼레이크와 트립플렛(Timperlake and Triplett, 1999)의 예를 들 수 있다. "공군조종사 출신이자 무기체계 전문가, 중국군사 분석가로 장기간 종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자 인터뷰와 비밀 해제된 문서를 인용하면서 특히 클린턴 정부의 군사 관련 프로그램 및 중국과 테러국들의 연계를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1999년5월에 공론화되었던 콕스 보고서(Cox Report)를 언급하며, 중국이 미국의 핵무기 기술을 훔쳐 무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동시에 클린턴 행정부가 경제적 이익과 자신들이 정치적 위상을 위해 안보를 희생시키고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채워주었으며, 중국 인민해군의 전쟁수행능력과 무

24) 신옥희 (2012), p. 14.

25) 위의글, p. 15.

26) 김유리 (2012), P. 63.

기관매 등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²⁷⁾고 경고하고 있다. 주(Zhu, 2005)는 원래의 세력전이론의 틀을 확장시킨 국제, 국내, 사회, 정책결정자의 네 가지 분석 수준의 고려를 통해 1990년대 이후의 미중 관계를 분석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잠재적인 세력전이가 평화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일 간 세력전이의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의 가능성은 미국이 갖고 있는 대중 영향력에 의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세력전이론의 예측이 자리를 잡히기 시작했다. 즉 2010년을 계기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도광양회'보다는 '유소작위'의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11년에 열린 3차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중국은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에 대해 언급하는 등 대립적인 모습을 노출한 바 있다²⁸⁾. 이로 인해 중국위협론을 더욱더 고조시켰다.

한편, 현실주의이론의 세력균형론과 달리 위협균형론은 국가들이 세력의 변화에 대해서가 아니라 위협의 변화에 대해서 균형을 추구한다고 본다. 따라서 적의가 국가능력의 분포와 그 변화에 따라 구조적으로 생겨난다는 신현실주의의 입장과는 달리 개별국가의 정체성과 정책결정자의 의도가 중시되며, 이는 관념적 변수에 대한 검토와 구성주의 혹은 신고전적 현실주의적 접근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하게 된다.

위협균형론자인 월트(Walt, 1987)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균형과 편승은 대개 능력의 견지에서 정해진다. 균형은 약한 편과의 연합이고 편승은 강한 편과의 연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화는 국가지도자들이 누구와 동맹을 맺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국가들은 더욱 더 큰 위협을 부과하는 대외적 세력에 대항하여 동맹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국가들은 약한 국가가 어떤 이유에서 좀 더 위협적이라면 다른 강력한 국가와 동맹함으로써 균형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과 그것이 가져오

27) 위의 글, P. 63.

28) 신육희 (2012), p. 15.

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미일을 중심으로 한 대항동맹 형성의 가능성이 제시되며, 그 결과로서의 균형, 즉 소극적인 평화(cold peace)가 도래한다는 추론이 행해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물질적 능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세력의 전환이 아니라 중국 혹은 중국의 정책결정자가 위협적인가의 문제이며, 이는 최근 빈번하게 거론되는 중국위협론의 논의에 해당한다. 영국학자인 램프턴(Lampton, 1998)은 논문에서 중국위협론의 기저를 이루는 다음의 11가지 주장을 검토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틀렸거나 과장되었다고 지적하였다²⁹⁾.

① 중국은 패권적 야심을 가진 강대국이다. ② 중국은 대규모의 군사증강을 진행하고 있다. ③ 타이완 지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단지 시간의 문제이다. ④ 중국은 다음번 아시아 경제위기의 대상국이다. 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은 근본적으로 서구의 실업문제를 야기한다. ⑥ 중국은 미 기업의 파산요인을 제공한다. ⑦ 중국은 세계최대의 지적도둑이다. ⑧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이다. ⑨ 중국은 홍콩을 망가뜨리고 있다. ⑩ 중국은 워싱턴 로비게임의 효율적인 주요 행위자이다. ⑪ 중국은 환경재난의 진원지이다.

하지만 이후 중국으로의 세력전이가 가속화되고, 위에서 언급된 중국의 적극적 전략으로의 전환이 거론되면서 중국위협론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중국위협론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한 연구는 인식(perception)변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아시아 주변국들이 중국의 부상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향력의 확대가 곧 위협인식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선호에 따라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미중일 세 나라 중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중국위협론을 공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논의의 대상국인 중국은 물론 이를 중국포위론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미일동맹 강화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29) 위의 글, p. 22.

받아들여지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전문가 집단의 미 대중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심화시키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 갖는 반 패권 의식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위에 현실주의이론들은 국가 간 세력관계가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핵심적 독립변인이라는 합의를 이루고 있더라도 단위수준의 다양한 변인들을 인과모형에 추가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상반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세력균형 등)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가 간 만족도 및 선호 등을 강조하는 세력전이이론,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개별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위협균형론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이 반드시 위협적일 이유가 없다³⁰⁾.

2. 자유주의의 시각에서 본 중국위협론

자유주의는 국가 간의 상호협력, 상호의존을 강조한다. 자유주의 시각은 현실주의 시각과 상이하게 중국의 부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자유주의이론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세력관계 변화 및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제도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는 참여행태라든지 개혁개방 이후 중국과 타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한편, 신자유주의이론은 현실주의이론과 달리 국가의 '능력'과 '의도'는 별개의 변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논리를 중국의 부상에 대입한다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성장이 위협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능력뿐만 아니라 중국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예를 들어, 중국은 1949년 이후 자국의 안보와 주권문제에만 무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을 뿐 주변국을 점령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적이 없다거나, 중국의 능력이라는 단일한 측면으로부터 미래를 추론하는 것은 불완전하며 기타 강대국과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중국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은 능력과 의도를 구분하려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30) 김태호 (2008), p. 37.

라 할 수 있다³¹⁾.

하버드대학의 존스톤(Johnston, 2003)은 중국위협론이 중국의 부상 자체를 불안요인으로 보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하고, 중국 지도층의 의도가 현상유지인지 현상타파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상타파세력이라고 하기에는 중국은 국제기구 가입도 늘고, 자유무역이나 핵비확산과 같은 국제 규범에도 적응하고 있으며, 지역 내 군사적 균형의 재편을 추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1차 대전 당시 독일에 비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하였다. 코넬대학의 크리스텐슨(Christensen, 1996)도 중국 인민해방군 및 중국 정부의 안보전문가와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그들의 인식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상타파보다는 현상유지를 옹호하고 있고, 현재의 경제발전과 국가통합을 방해받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대만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므로,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독립시키려 할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1990년대 중반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존스홉킨스대학의 램턴(Lampton, 1998)도 중국위협론의 화두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중국은 단기간에 헤게모니를 추구할 의도도 없고, 군비의 확대도 급상승하는 물가를 반영해 보면 그리 큰 폭도 아니며, 유지비의 의미가 크다고 보았다.

물론 중국 대외관계 연구자들 역시 장기적이고 원칙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러한 중국 대외관계 연구자들은 정부의 형성과정에서 위협론을 주장하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절충하고,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제언하면서 중국 외교의 전략 목표를 분석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였다³²⁾.

또한 이동률³³⁾의 "한중 정치관계의 쟁점과 과제" 중에서 한국의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언급했다. 한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매우

31) 위의 글, pp. 39-42.

32) 김유리 (2012), p. 65.

33) 이동률, "한중 정치관계의 쟁점과 과제," 전성홍, 이종화 (편), 『중국의 부상』 (서울: 오름, 2008), P. 242.

복잡하고 유동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사 왜곡 논쟁을 전후하여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한국에서 중국기회론, 심지어는 중국대안론에서 중국경계론, 중국위협론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극단의 인식들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소위 중국기회론으로 대표되는 1997년 이전 시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중국경제의 도약과 이에 비례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중경제협력으로 인해 한국에게 중국의 부상은 시장 및 투자 기회의 확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고도성장에 편승한 추상적 중국기회론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중국경계론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중국의 한국경제의 강력한 경쟁자로서의 부상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교차되면서 중국의 부상을 도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중국경계론 역시 중국기회론의 반작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기회론 못지않은 모호성과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중국경계론 또는 중국위협론은 경제적 경쟁심화와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에 기초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위기 심리가 내재된 중국경제 경계론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적 중국위협론은 향후 국제경제 환경, 한중경제관계, 한국과 중국의 국내경제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변할될 개연성이 있다. 둘째, 한국에서 중국의 부상에 기초한 중국위협론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형성된 것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위협인식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일부 한국 언론을 중심으로 고구려사 왜곡,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 급증, 북핵문제 등을 근거로 북한 급변 사태시 중국의 군사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충분한 근거와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가 중의 하나임에 분명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부에서조차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하여

경계와 부정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시각이 중국의 부상을 모두 협력 지향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인성론, 권력, 힘 등 요소를 중요시하는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중국경제위협론', '중국군사위협론'과 비교해보면 자유주의 이론에 속해 있는 '민주평화론'은 '중국위협론'을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확대시켰으며 중국의 '집권체제'와 사회주의의 정치체도가 서구에게 위협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냉전의 종언과 9.11은 기존의 물질적 구조 중심의 체제이론의 적실성에 대한 의문과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국가의 정치체제와 전쟁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민주평화론은 기존의 체제수준 이론과는 다른 단위수준의 논의를 제공하였다. 민주주의와 평화 사이의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민주평화론은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한 공화정에 대한 규범적 강조와 민주정체 사이의 전쟁 부재라는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다. 이는 단순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강화와 확산을 통한 세계평화의 구축이라는 미국의 21세기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평화론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민주주의로의 성공적인 이행은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정책결정 엘리트에 의한 위협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다고 보는 자유주의 평화론의 입장은 중단기적인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의 부재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대항균형의 의도를 갖게끔 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가 중국의 인권이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외부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측면 역시 존재할 수 있다. 민주평화론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은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존재와 민주화 과정이 갖는 영향을 구별한다. 예를 들어 스나이더(Snyder, 2000)는 민주화가 호전적인 대외정책의 채택으로 이어져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했던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중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권력투쟁이나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등장하여

대내외적인 불안정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체제 국가 간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적 논리 역시 중국의 부상을 위협적으로 분석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차야(Acharya, 2010)는 이런 논의가 경제개혁이나 긍정적 민족주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같은 민주화 과정과 불안정성 사이에 위치하는 완화 효과들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동아시아에서의 민주화가 지역 내 협력안보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³⁴⁾고 주장한다. 엄상윤은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안보질서 변화" 중에서 중국의 부상은 분명히 동아시아의 안보질서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동아시아 및 세계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이 미국의 품을 벗어나서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고 미국의 품 안에 안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 그 자체만으로는 동아시아의 안보질서 변화를 단언하기 어렵다.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민주화는 동아시아의 안보질서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논리적 측면에서 중국의 민주화는 동아시아 안보구조 자체의 변화를 야기하여 세력균형에 입각한 다극체제의 형성을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적인 민주화 추세, 중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갈등,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추동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는 근대화이론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민주화도 요원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의 민주화 조짐이 별로 감지되지 않는다. 중국의 사회주의체제 지속은 중국경계론의 지속을 의미하고 중국경계론의 지속은 양극체제에 입각한 동아시아의 안보구조의 지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 간의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이완된 양극체제가 향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 같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및 이에 기반한 대대적 군사력 확충이 미국 국력의 상대적 쇠퇴와 맞

34) 신육희 (2012), p. 18.

물려 미중 간의 군사력의 상대적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역학구도의 변화 추세도 지속될 것 같다. 'G2시대'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군사적 초강대국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³⁵⁾고 했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이론은 현실주의이론보다 중국의 부상을 국가 간의 상호협력, 상호의존의 관계, 의도, 그리고 '단위수준'의 요인들에 분석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보다 다양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시각은 중국의 부상이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현실주의의 다소 결정론적 전망과 달리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³⁶⁾.

3. 구성주의의 시각에서 본 중국위협론

탈냉전이후 많은 국제관계론 학자들은 세계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로 돌아섰다. 비록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과 어떤 이론적 가정을 공유함으로써 이들과 관련되는 해석을 보여주는 느슨한 패러다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는 다른 무엇이 있다. 군사력 그리고 경제적 부와 같은 물질적 요소들이 국가 사이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하는 현실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는 대조적으로 구성주의 이론은 세계가 어떻게 세계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관념과 이해의 공유를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강조한다. 구성주의자들은 인식이 재배적인 태도에 의하여 어떻게 형성되는지, 즉 이러한 이미지의 상호주관적인 성질을 강조한다. 우리 모두는 세계정치에 대한 집단적인 개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속하는 준거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35) 엄상윤,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변화," 이상현 (편),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 안보지도』 (세종연구소, 2011), p. 39.

36) 김태호 (2008), p. 43.

지배적인 관념이 변화할 수 없는 것과 변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세계정치를 새롭고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³⁷⁾.

미국 언론 및 정책연구소, 일반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이와 같은 중국 위협론에 대하여, 지역연구에 기반을 둔 기존 중국 국내 및 대외관계 연구자들은 비판적이거나 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각국 중국연구자들의 대중국 인식을 종합한 연구에서, 켈러와 러스키(Keller and Rawski, 2007)는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초점을 두어 위협론에 비판을 시도하였다. "전통적 군사력에만 의거한다면 무력충돌 우려가 있겠지만,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핵무기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그러한 충동을 방지한다고 보았다. 실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미국과의 협력을 더 중시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원칙을 가지고 아시아 외교를 한다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³⁸⁾고 설명하였다. 또한 구성주의이론에 따르면, 구조적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이론은 비록 상이한 이론적 가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합리성'을 기본전제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고유한 '정체성' 혹은 '규범' 등과 같은 관념적 요인을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부상에 관한 구성주의적 시각은 중국의 외교, 안보행태를 타국과의 세력관계와 같은 물질관계가 아니라 국제적 규범이나 중국의 고유한 문화 및 규범 같은 관념적 요인에 따라 분석한다. 즉, 물질구조가 중국의 구체적 외교, 안보행태를 결정한다거나(현실주의) 관념적 요인은 개입변인(자유주의)이라는 논리를 거부하고 관념변인 자체가 행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성주의적 시각은 크게 중국과 국제규범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국제적 차원과 중국의 고유한 관념을 분석하는 일국적 차원의 분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중국과 국제규범 간의 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부상하는 중국이 국제적 규범을 수용하는 과정 및 양상을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상정한다. 특히, 이들 구성주의적 시각은 중국의 국

37) 찰스 W. 케글리 (2010), pp. 54-55.

38) 김유리 (2012), p. 66.

제적 규범수용을 인지적인 '사회화'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현실주의 및 자유주의와 명확한 차이를 드러낸다. 반면, 중국이 국제적 규범을 수용하는 것과 동시에 이른바 '연성권력'을 통해 오히려 타국의 대중국 관념을 변화시킨다는 주장 역시 중국의 부상을 분석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았던 것이나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 그리고 타국과의 인적, 문화적 교류의 확대는 이와 같은 중국의 행태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한편, 타국가들과 구별되는 중국의 독특한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 역시 중국의 외교, 안보행태에 대한 또 다른 구성주의적 접근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대외행태는 역사, 문화, 인식의 독특성을 파악할 때 비로소 정확히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편적 합리성을 가정하는 공리주의적 국제관계이론(현실주의, 자유주의)을 비판한다³⁹⁾. 국제관계의 구성주의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접근은 중국을 둘러싼 역내 국제관계의 특수성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여긴다. 먼저 이들 연구는 위계성을 핵심으로 삼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전통적인 특성을 무정부성을 가정한 서구적 의미의 국제정치와 구별된다. 즉, 현재 서구의 국제관계가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주권국가 간의 상호관계라면,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비록 그런 서구적 논리가 전이되었다고 하더라도 위계적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 국제정치의 일반적인 특징인 국가 간의 '세력균형'은 중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중국의 빠른 부상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들이 대중국 세력균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위계적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보다 안정화시킬 것이라는 결론 역시 가능하다.

구성주의의 이런 시각이 중국의 부상을 현실주의에 비해서 보다 긍정

39) 김태호 (2008), p. 43.

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협적인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즉, 국제규범의 '인지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보다 현상 유지적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으나, 중국 전략문화에 고유한 현실주의적 행태는 중국의 부상이 타국에 보다 위협적인 행태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중국이 현상유지국가로 그 성격이 변화하더라도, 대내적 사회불안정과 대외적 안보딜레마 등으로 인해 위협적인 대외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구성주의적 시각의 이러한 양면적 전망을 뒷받침한다⁴⁰⁾.



40) 위의 글, p. 48.

IV. 중국위협론에 대한 반론

1. 중국기회론

1999년 4월에 주룽지 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연설했을 때 '중국위협론'을 '중국기회론'으로 바꿔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기했다. 즉,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며, 중국의 발전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다는 것이다.

미국 국내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더 이상 간여하거나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이미 보편적인 것이다. 중국이 또한 자신의 부상이 평화적이라는 이미지를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2010년의 공세적 외교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 들어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는 평화적 부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주장도 자주 목격된다. 예를 들면 한 분석가는 중국의 부상이 세 가지 '不'에 근거한 평화적 부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의하면, 첫째, 중국부상의 길은 쉽지 않다(中國崛起不容易)는 것이다. 중국은 역사상 전례 없는 대국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이자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기도 하다. 중국은 56개 민족, 13억 인구가 화목하게 살고 있으며, 세계의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60여 년간의 안정과 발전을 유지해왔다. 많은 서양인들은 이러한 중국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종종 중국을 비난하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데, 해외 인사들이 중국의 발전에 대해 비난이 아닌 더 많은 이해와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다른 나라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中國不能照搬別國發展模式). 중국의 특수한 국가실정과 발전 수준은 자국의 실제 상황에 맞는 발전 노선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해외의 선진 과학기술 및 자본과 인재를 포함한 경영 노하우를 성공적으로 도입했고, 이를 통하여 4억 명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셋째, 중국은 평화

발전 노선을 견지하며, 현행 국제 시스템을 뒤엎으려 하지 않는다(中國不謀求推翻現行國際體系). 중국은 현행 국제 시스템의 참여자이자, 건설자, 공헌자인 동시에 수혜자이기에 구소련처럼 군사단체를 만들거나 세력 범위를 구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⁴¹⁾ 사실은 중국의 위협론과 기회론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은 오래전부터 진행해왔다. 이런 문제들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면서, 중국을 실질적인 의미로서 보는 시각의 차이이다. 우리는 지금 중국이 위협론이라는 경성권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론으로서의 연성권력을 강조함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성해짐에 있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수년 동안 중국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는 경제성장 제일정책을 추진해왔고, 중국경제의 상호의존성과 대외의존도로 인해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호의존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력을 통해서 국익의 확대나 분쟁개입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중국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로이(Roy)의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확인된다. 중국에서 오는 위협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것이며 중국의 군사력도 부풀려져 있다고 보고 있는 이들은 중국의 의도와 전략, 그리고 경제성장의 과정과 노력이 왜곡되거나 과장되고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전략적 위치에 맞는 군사력을 건설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아시아나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지나친 중국경제론이 기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들이 바탕에 깔려있다. 먼저, 상호의존성이 심화라는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중국으로서는 평화와 안정 속에서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 중국의 대국화 또는 군사화는 인접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과 대중압력을 강화시키게 됨으로서 중국이 지역을 지배하거나 세계의 패권세력이 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의 위협이 감소 또는 억제될 수 있을

41) 이상현 (2011), pp. 14-15.

것이라는 점, 그리고 로이의 주장처럼 환경문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 경제격차, 소수민족문제, 인구문제, 범죄와 치안불안, 농민들의 소요와 같은 문제들은 중국의 강대국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의 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인식의 공통점은 중국의 위협이라는 문제를 논하기 전에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⁴²⁾.

첫째, 기회론자들은 아직은 중국이 경제발전을 걱정하는 '가난한 대국'(hungry power)에 지나지 않으며 중화제국을 확대 팽창시키려는 세력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군사비를 증가시켜 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병력이나 무기체계는 낙후되어 있으며 공군과 해군의 경우에도 미국, 대만, 일본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중국의 통계에 대해 의구심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기회론자들은 “중국의 군사비는 전 세계 군사비의 8% 정도를 차지하는 미미한 존재이며, 특히 미국이 추정하고 있는 1000억 달러도 6500억 달러 가까운 미국의 군사비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은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2급 군사력' 보유국임을 강조한다. 일본의 미츠이물산 전략연구소의 스스키 주장은 전 세계 군사비에서 차지하는 군사비의 비중을 보더라도 미국이 42%인데 비해 중국은 겨우 8%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1인당 군사비 부담액도 미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있다(2012년 기준)”⁴³⁾. 더욱이 중국의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비의 증가는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사영기업 부문을 포기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보상금의 성격도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9월에 중국이 발간한 「중국의 군비통제와 군축」 보고서 중에서 중국의 국방비지출이 언제나 국가의 안보에 필요한 최저수준만을 유지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은 생각했던 것보다 위협적이지

42) 진희연, "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외교정책," 『중소연구』 (2004), pp. 97-99.

43) 关注中国, <http://strongestchina.blog.163.com/blog/static/4921337201371311114278/> (검색일: 2013.8.8).

않으며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한 후에 군 병력도 500만에서 250만까지 감축되어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장비가 노후화 되어있고 국방기술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강국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기회론자들은 중국의 방위전략이 공격적이고 도전적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중국의 전략은 방어의 목적을 위주로 하며 수세적인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중국의 군사력증강이 다분히 방어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된다는 중국의 입장과 유사점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현재 중국이 공격능력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이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군사력현대화가 아시아지역에 있는 미군세력에 도전할 것이라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은 중국이 21세기 초에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지만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 또한 이익의 갈등이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무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어야 하나 중국은 이를 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걸프전, 미일방위조약, 한미방위공약, 아프가니스탄 공격, 그리고 이라크전 등에서 미국의 의지 외에 군사력을 과약한 중국의 지도자들이 아시아에서 미국과 대립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주장을 강화하는데 제시된다. 이들은 또한 중국이 1985년부터 지속적으로 병력을 감축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중국의 공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전쟁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이나 미군전투기와의 충돌사건의 신속한 해결 등에서도 감지된다.

셋째, 중국의 경제력과 잠재력에 대한 과장이다. 지나친 내수의존과 수출 감소, 1430억 달러에 달하는 서부 대개발과 사회간접자본투자로 인한 천문학적 공공부채, 은행의 부실채권의 증가 등은 금융위기의 조짐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통계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중국의 경제적 문제점들을 찾아보면, 실제 '중국위협론이'이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하

여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⁴⁴⁾.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 정도인 개발도상국에 불과하다. 또 중국이 지난 30년간 경제 규모를 5배나 확대한 고속성장을 이룩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1/2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중국이 현재의 고도성장을 계속한다 해도 중국의 GDP는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중국의 경제능력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국가통계국장도 경제성장이 과장되었음을 인정했으며⁴⁵⁾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클라인(Lawrence R. Klein, 2000)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4.7%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중국의 실제 경제성장은 3~4%로서 중국이 주장하는 수치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면 중국이 성장신화가 과장되었다⁴⁶⁾고 주장한다. 중국이 최근 보다 적극적으로 위협론의 허구를 주장하고 서방의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미국이나 일본과의 국력이나 군사력 격차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넷째, 중국의 대외정책은 독립자주, 선린외교, 반패권주의의 원칙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뉘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건설목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대외정책의 기본원리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외교정책에 기초변화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독립자주외교’의 추진과 ‘반패권주의’의 재천명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 이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점진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안정적인 안보환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기초한 중국지도부는 ‘사회주의의 현대화건설’이라는 국내정치적 과제와 ‘안정적인 국제환경의 확립’이라는 대외정책 목표가 상호 연결된 것이었다. "국내적 성장과 이를 위한 국제적 질서의 확보라는 이중적 전략목표를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것이 ‘평화공존의 5원칙’에

44) 정영록, 『중국의 경제개혁 평가』 (현대중국연구, 2005), p. 32.

45) 진희연 (2004), p. 100.

46) 위의글, p. 101.

대한 강조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선린외교’를 주장하는 외교변화를 가져 오게 된 것이다. 대외정책에 있어 선린우호정책은 탈냉전 이후 중국 외교전략의 중심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대내외적 환경에 있어 경제적 협력이 최우선과제임을 인식하여 개혁개방이후 경제발전의 목표를 위하여 주변국들과 경제적 협력 대상 다변화와 평화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상호의존성이 초래하는 평화유인기능을 통하여 주변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운 역내 안보환경을 조성해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⁴⁷⁾. 한편으로 중국이 표방하는 화평굴기, 혹은 화평발전은 평화를 수단과 방법, 그리고 그 목적으로 설정한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서구의 언론들은 이런 중국의 전략을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중국위협론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중국의 지도부는 국제사회에서의 패권쟁탈, 또는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위한 공격적이며, 직접적인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부상'을 전면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영리하게 강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부상'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약간 공격적인 경향을 '평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무마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불신과 견제를 잠식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후진타오 주석은 보아오 포럼(Boao Forum)에서 '화평굴기(和平崛起; Peaceful Rise)'라는 말 대신 '화평발전(和平發展; Peaceful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함으로써 중국의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부상하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중국이 자신들의 대외 전략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용어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구체적인 용어의 사용과는 관계없이 중국이 외교의 목표로 '평화 외교'를 뚜렷하게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 외교 전략의 기초는 중국이 신 중국 최초의 국가 문헌인 <공동강령(共同綱領)> 제 11조에서 세계의 영속적인 평화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외교의 임무로 간주하고 국제사무를

47) 이정태, “후진타오 정부의 신국가 전략,” 『대한정치학회보』 Vol. 13 No. 1 (2005), p. 231.

처리함에 있어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한 숭고한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⁴⁸⁾.

마지막으로 중국이 국제적인 원칙이나 규범을 무시하는 '불량국가'(rogue nation)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반대한다. 위협론자들은 파키스탄에 대한 무기판매, 이란에 대한 핵무기개발 지원과 화학무기판매, 미국의 캘리포니아 갱들에게 AK-47 기관총 밀수, 1999년의 미국의 핵연구소로부터 핵기술 관련 문건 절취사건, 불법복제 등과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구성원과는 거리가 멀며 언젠가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충돌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호한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조만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협력을 중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근거로 중국이 안보리에서의 거부권 사용빈도가 현격히 감소되었다는 점, WTO, IMF, World Bank,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APEC 이나 ASEM 과 같은 국제적 기구나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들을 제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그릇된 것이라 주장한다. 중국을 일반적인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하여 불량국가로 인식하는 것은 단순하고 위험한 시각일 수도 있다. 일련의 무책임하고 비인도적 대외적 행위나 행동은 중국의 국가적 행위라기보다는 개혁개방의 부산물인 중앙정부의 거시조절(macro control) 능력의 약화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⁴⁹⁾.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현안이나 이슈들은 우선 순위, 이익의 존재여부와 정도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마찰이 곧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충돌이나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중국붕괴론

중국만큼 수많은 약점과 거대한 힘이 혼재돼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판단도 이 둘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달

48) 방수옥,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중관계』 (인간사랑, 2004), p. 45.

49) 진희연 (2004), p. 101.

라진다. 중국은 앞으로 수년간 주기적으로 정치·경제적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천안문사태와 같은 학살을 겪거나 금융위기를 당할지도 모른다. 대규모 부패로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도 불안 요소이며, 티벳과 신장의 분리주의자들의 폭력사태는 늘어갈 것이다. 이럴 경우 쿠데타 가능성도 있다. 또한, 권력교체기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보시라이 사건과 같은 내부 갈등설 외에도, 최근 중국 안팎에서는 소위 '중국 붕괴론'과 향후 중국의 정치적 안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후계자 구도를 둘러싼 내부 갈등설은 비공개적인 중국정치의 특성상 그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서방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중국붕괴론' 등의 문제는 중국 내에서도 활발한 논쟁이 일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 중에 첫 번째 범주를 형성하는 것은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른바 '중국붕괴론' 또는 '중국분열론'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박병광의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잘 정리해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 들고 있는 예로 고든 창(Gordon G. Chang, 2001)은 그의 저서 "곧 붕괴할 중국(The Coming Collapse of China)"에서 중국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부패한 공산당과 빈사상태에 놓인 기업과 은행들이 존재하며 결국은 중국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비록 직접적으로 중국의 붕괴를 예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스퍼 베커(Becker, 2000) 역시 그의 저서 『중국(China)』을 통해 중국에서는 중앙정부 지도부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고 왜곡됨으로써 현재 보여 지는 중국에 관한 지표들은 무의미하며 결국 중국에 대해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낙관적 믿음은 '위험한 과신'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중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분열론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연구 성과가 중국 내에서도 발간된 바 있다는 점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왕소광, 후안강, 1994)이 내놓은 『중국국가능력보고서』를 들 수 있다. 왕과 후는 개혁개방이후 중앙정부의 재정수취능력(국가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

됨으로써 국가의 재분배기능과 사회통제능력이 약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분열에 직면할 수도 있다⁵⁰⁾고 경고한다.

중국분열론을 주장하는 시각은 정주기적 역사관을 채택하는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일 수 있겠으나 구소련과의 단순비교에 집착한다거나 또는 일정부분 반공산당의 정서를 대변하는 듯한 편견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서구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공산당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중국사회와 경제의 부정적인 면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지를 전개하는 논자들의 상당수는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또는 중국계로서 공산당 일당독재와 천안문사건 등 정치적 문제를 매우 중시하며 자신의 정치적 시각을 중국의 미래에 대한 평가에도 확대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분열/붕괴론이 제시하는 비관적 전망의 근거를 정리하면 첫째, 중국은 경제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어딘가 한가지의 심각한 문제-예컨대 실업자의 대량양산이나 대기근-가 발생하면 도미노 현상으로 경제와 정치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둘째,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나면 중국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더불어 경제와 사회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상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며 셋째,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마찰이 격화될 때, 지도부 내에서 전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와 같은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이 나타나거나 또한 보수파의 등장으로 인해 체제와 여론을 분열시켜서 공산당의 통제능력이 급속히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들은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실패하고 민주화 과정에 있어 혼란이 일어나 체제가 붕괴되고 무질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고 보겠다⁵¹⁾.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여 년간 8%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경제 고도성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50) 박병광 (2004), pp. 8-9.

51) 위의 글, p. 10.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나와 있는데 성공적인 개혁, 개방 정책, 구조조정 정책, 중국인의 높은 저축률, 그리고 화교 상권과의 협력, 외국투자증가(FDI)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붕괴론이 나오고 있다. 이는 먼저 정부 관리들과 4대 은행의 부패로 경제가 붕괴의 변두리에 이른 중국은 2004년도에 인민폐 4억 위안을 추가로 찍어내어 국고의 빈자리를 채웠으며 이제는 완전히 해외 투자에 의거하여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미국에서 발행하는 계간잡지 『차이나이코노미』를 비롯해 『타임지』 그리고 미국계 화교 변호사인 장찌아둔(章家敦)이 펴낸 『중국은 곧 붕괴한다』(中國即將崩潰)라는 책을 필두로 맹렬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핵심논지는, 중국은 '사막 위에 세워진 빌딩'이라는 것이다. 즉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경제 성장률은 실제로는 중국정부에 의한 통계수치 등의 과다한 부풀림과 조작에 의한 허구적 수치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중국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중국정부의 부채 잔여 액만 보더라도 GDP의 1.4배를 넘어서고 있어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예언하고 있다. 『중국은 곧 붕괴한다』라는 책을 펴낸 장찌아둔은 여기서 한발 짝 더 나아가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아니라 붕괴해가고 있는 중국(의 세기)'이라고 말해야 한다며 중국의 현행 정치·경제 제도는 길어보야 5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전에 중국은 이미 '절단'난다는 논리다. 또한, 『중국의 몰락』, 『중국은 가짜다』란 책을 쓴 저자들도 하나같이 중국의 경제적인 면과 그 밖에서 붕괴론을 말하고 있다⁵²⁾.

중국은 일당 독재의 정치제도, 언론과 보도자유 부재, 정부가 너무 많은 자원을 통제하고 있고,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하지 못하고 경제 구조 중에서 민영기업 부문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공산당과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난

52) 해피캠퍼스, <http://mybox.happycampus.com/click4001/542855> (검색일: 2013.8.8).

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학자이며 중국의 민주인사인 팡쥘(方覺)은 매우 흥미로운 견해를 내놓았다⁵³⁾. 그는 '중국 공산당은 부패 창출자인 동시에 부패 소멸자'라고 했다. 또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중국은 부패를 철저히 없애버리려 하지 않지만 동시에 부패가 계속 만연하게는 두지 않을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부패가 매우 창궐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 그 기세를 좀 꺾어 놓는 척 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또 부패를 방임한다'고 했다. 만약 부패를 철저히 소멸한다면 중국공산당 체제는 유지해 나가기 어려우며, 그러나 또 부패가 과도하게 만연하면 마찬가지로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팡쥘은 또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부패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국민의 분노로 인하여 어느 한 시점에서는 악랄한 부패 세력에 대해 조금은 제한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밖에도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실업문제, 3농 문제, 에너지자원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전부터 나왔던 것이다. 덩샤오핑이 '선부론'(先富論)정책을 쓰면서, 해안, 연안 지역 먼저 발전하고 내륙지방은 서서히 발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간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서부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또한, 실업문제는 대학과 대학졸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이들에 대한 취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도시 실업인구 중에서 35세 이하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년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또한 농촌 청년들이 도시로 들어오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서, 점점 실업문제로 정부는 골치를 쓰고 있다. 도시로 농촌청년들이 들어오는 것을 3농문제를 보면, 이는 중국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며, 8억 이상이 농민인 중국으로 보면, 이로 인해 붕괴될 확률로 크다고 본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민의 소득수준은 상대적, 절대적으로

53) 方覺, "从廉洁神话回到腐败现实," 『方覺专栏』(2007), p. 4.

저하되고 말았다. 농업을 바탕으로 한 농민들의 평균소득은 점점 감소세를 나타냈다. 1978년 도시와 농촌 가구의 1인당 평균소득 격차는 2.36배였는데 98년에는 2.51배, 2002년에는 2.79배로 점차 확대되었다. 1997년 세계은행이 제출한 한 보고서에서는 도시 주민들의 직장에서 얻는 실제 소득을 고려한다면 도농 간의 실질적인 소득격차는 약 4배 이상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이 왕성한 중·청년 농민들의 이농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농산품시장이 점차 확대 개방되면서 이러한 이농현상은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3농 문제는 통상 농업부문의 인력 과잉, 농촌의 농업소득 감소 및 농외소득 증대 제약, 농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 과다 등으로 지적되며 최종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문제로 귀착되었다.

중국은 대다수 국민이 농민인 아직도 농업중심의 국가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삼농 문제를 제 때 해결 하지 못해 중국 농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경우 중국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석유, 석탄 등 에너지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다르게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중국붕괴론'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언들'이라고 치부하는 한편으로 후안강(胡鞍剛)등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치밀한 경제학적 논리들을 근거로 전면적인 반론들을 펼치고 있다⁵⁴⁾. 즉, 중국의 통계수치 일부에는 과거 계획경제 시대의 유산인 부풀린 수치보고 등으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구제도와 새로운 제도 사이의 모순이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성장률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평균 7-8%대의 성장률은 이미 '세계은행'에서도 공인한 바 있는 공신력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서방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계조작설 등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4세대의 경제정책을 보면 경제정책의 골간은 '조화 속 성장'이다. 무리한

54) 胡鞍钢, "畅想中国梦," 『光明日报』(2011), p. 3.

성장보다는 분배와 균형을 강조했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격차, 투자과열, 부동산시장 거품, 위안화 가치의 안정관리, 에너지 부족 등 무리한 성장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를 치유하겠다는 뜻이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경기과열 억제 정책 지속 실시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철폐로 내수 확대 도모하며,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공업화 가속하며, 산업입지정책을 펼치며, 금융 및 농업 분야의 개혁을 꾀하며, 외국기업에 대한 정책으로 '질 나쁜 외자는 거부하다'라고 원자바오 총리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외자 이용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중국의 미래가 과연 '사막 위에 세워진 빌딩'의 운명이 될지, 아니면 10년 이내에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할지 현재로서는 그 어느 것도 단언하기 힘든 문제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단기간에 이 거대한 '빌딩'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문제를 봤을 때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세계 인구의 21.6%인 13억 인구의 운명을 손에 거머쥐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특히 미국과 유럽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10억의 중국 농민들은 중국의 사회구조 피라미드의 최하층을 구성하고 있다. 이농민들은 현재 불만이 넘쳐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산당에 불복종을 한다. 또한, 중국은 많은 집단들과 싸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있다. 중국 사회의 각종 모순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각종 시위와 폭동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끊이지 않고 빈발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의 심각한 부패로 가장 공산당을 옹호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반부패, 반공산당의 행렬에 가담하고 있다. 거기에 6.4천안문 민주화운동 진압과 5년간의 파룬궁 탄압으로 중국공산당은 서민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그 기반을 잃고 말았다.

중국인들은 이제 다시는 공산주의를 믿지 않고 중국공산당을 믿지 않는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중국공산당은 손에 장악하고 있는 마스크를 통해 애국주의를 극구 선양하며 중국을 사랑하는 것이 곧 중국 공산

당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게 하는 한편 진실한 말을 하는 반체제 인사와 지식인을 체포하고 인터넷을 봉쇄하는 등 수단으로 민주적인 목소리를 압살함으로써 인민들의 각성을 막고 태평성세의 가상을 꾸미고 있다. 파룬궁 사건은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로 인해 세계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먼저 천안문 사건이란 1989년 6월 3일 밤 10시 중국 인민해방군은 베이징 천안문(天安門) 광장을 뒤덮은 100만 명의 시위대에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탱크와 장갑차까지 동원한 무력 진압은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이어졌다. 진압을 끝낸 후 당시 중국정부는 천안문 광장에서 사망자 한 명도 없다고 밝혔으며, 외신은 수천 명의 시민과 학생이 무력 진압에 의해 숨졌다고 발표했다. 처참한 ‘피의 일요일’로 만든 이 사건이 바로 ‘6·4 천안문 사건’이다. 시위는 4월 15일 후야오방(胡耀邦) 전 당 총서기의 사망이 발단이였다. 젊은 학생들은 급진개혁론자였던 그가 보수파 원로들에 의해 축출된 후 쓸쓸히 숨지자 불같이 일어났다. 베이징대학을 중심으로 후야오방의 명예회복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점점 불어났다. 5월 15일 베이징을 방문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 일행마저 창안(長安)가 뒷길로 돌아가게 만들 정도였다. 이렇듯 중국인들은 현재 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정치적 문제를 살펴본다면 중국은 문화대혁명과 대약진 운동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십몇년 후 되는 상황을 겪었다. 이 시기 중 중국 농민들은 더욱 가난해졌으며, 공산당이나 지방관리, 고위층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농민들은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밖의 중국의 정치적 붕괴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지는, 덩샤오핑 사후 장쩌민이 주석 직을 승계한 이후 불거졌던 논쟁의 맥락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즉 문화대혁명 이후 이른바 '합법성의 위기'를 맞고 있던 78년 이후, 덩샤오핑은 당 내에 확고한 지지기반과 혁명원로라는 카리스마를 배경으로 하여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출구를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데 반해 장쩌민 시대에 '낙하산식' 권력승계로 인해 그 안정성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마찬가지로, 당시 후진타오로 예상되고 있는 중국의 제4세대 지도자의 부상을 앞두고 서방일각에서는 또 다시 권력교체 후 중국정부와 정치제도 등이 빠르게 붕괴해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들도 나왔다. 즉 16차 당 대회 이후, 장쩌민 체제하의 정책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투명하고 대량 실업과 부패 등으로 팽배해진 기층의 대중적 불만들이 폭발직전에 있는 상태라 지속적인 체제안정이라는 긍정적인 낙관론을 펴기 힘들다는 주장이었다⁵⁵⁾.

현재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도 이런 주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서 중국인민들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비록 중국공산당이 인터넷을 통제시킬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일반 인민들에 대한 폭행 등 뉴스도 계속 보도하고 있다. 인민들은 정부, 심지어 자기나라에 대한 불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또한, 중국의 반국가 분열법 역시 중국이 곧 붕괴된다는 보도도 나왔었다. ‘반분열국가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공산당의 군사적인 침략에 대한 우려를 나타나게 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반분열국가법’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어긋나는 상황에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적 갈등과 정권 교체로 인한 내부 권력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타이완 문제가 사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국공산당을 일체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비이성적인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게 만들었는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근본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체제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중국 대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이지를 잃은 것은 바로 ‘9평 공산당’과 탈당 열조이다. ‘9평 공산당’을 발표한 후, 중국공산당은 갑자기 할 말을 잃었으며 ‘9평 공산당’을 직면할 용기마저 잃어 ‘9평 공산당’ 열독을 금지

55) 해피캠퍼스, <http://mybox.happycampus.com/click4001/542855> (검색일: 2013.8.8).

한다는 내부 비밀 공문서를 하달하는 한편 가짜 ‘9평 공산당’을 퍼뜨려 멸망의 시간을 단축시켰을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9평 공산당’의 힘이 그렇게 큰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9평’을 본 적이 없거나 이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9평’이 나온 후, 중국공산당의 멸망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9평’은 중국공산당 통치의 불합법성과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방대한 사교 집단인 중국공산당의 본질을 남김없이 폭로했다. ‘9평’ 발표 후 고조되고 있는 탈당 열조는 중국 공산당의 와해를 가속화시켰다. 멸망의 위기에 몰린 중국공산당은 ‘9평 공산당’과 퇴당열조를 저지시키기 위해 여태 명줄을 이어주었던 해외 투자가 줄어드는 대가도 감수하며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한차례 큰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는가? 그들은 마치 거의 죽어가는 늑대가 죽기 전의 몸부림으로 안간힘을 모아 한 번 울부짖는 것처럼 타이완에 위협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의 체력을 깡그리 소모하여 사망을 가속화 했을 뿐이다. 네선(聶森)은 후 중국공산당시기(後中共時期)가 끝난 후, 잇따라 곧 '신 중국(新中國)'시대에 진입할 것이다. '전 화교 민주평화 연맹'고문 린보화(林保華)는 신 중국은 혼란하지 않을 것이다. 전 소련이 해체되어 4, 5개 공화국으로 분열된 후, 인민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살고 있고, 오히려 더욱 더 자유롭고 행복한 데, 이 점은 중국공산당이 붕괴된 후, 중국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했다.

1990년대 들어 중국분열/붕괴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에는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특히 대륙국가인 구소련의 붕괴에 이은 독립국가연합(CIS)의 성립이 가져온 충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구소련의 단순비교에 근거를 둔 중국분열론은 매우 취약한 기반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구소련이 가졌던 소수민족문제는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서 비 러시아민족의 비율이 20%에 달했으며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최대 민족 집단을 형성

하는 곳 또한 적지 않았다. 물론 중국에게 있어서도 소수민족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구소련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전체 인구에서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며 소수민족의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50%를 상회하는 곳도 32개 성급단위 가운데 티벳과 신장 등에 불과할 따름이다. 또한 역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국붕괴/분열에 이르는 상황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농민의 봉기와 지방군벌의 대두 그리고 외세의 침입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어야 하지만 현재 중국의 발전적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따라서 중국분열론은 적어도 단, 중기적으로는 그 현실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⁶⁾.

3. 책임대국론

책임대국론에 대한 중국의 논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평가를 반박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중국위협론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평가로 세계에 인식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⁵⁷⁾. 중국위협론자들은 국제정치 현실주의이론에 입각하여 중국의 패권추구 능력과 의지라는 두 개의 영역에서 중국위협론의 적실성을 분석했다. 이들은 "중국의 패권추구 능력이라는 면에서 중국의 국방예산과 중국의 군사현대화작업을 주로 검토하였으며, 중국의 실질적 국방예산은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국방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1000억불 이상의 수준이고 중국의 국방현대화 작업도 자국의 안보증진보다는 군사적 팽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의 패권추구 의지에 대해서도 중국은 전통적으로 폭력 지향적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를 유지하고 있고, 역사상의 강대국 출현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중국은 부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패권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화의 조류 속에서 반민주적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고집하고 있다는 면에서 중국위협론의 적실성을 주장하였다"⁵⁸⁾.

56) 정재호,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론』 (서울: 나남출판, 1999), pp. 344-351.

57) 李小华, “解析中国威胁论与中国崩溃论的神话” 『当代亚太』 vol.11 (1999), pp. 19-24.

이와 같이 중국위협론의 팽배로 중국은 자신의 국력이 증강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강국, 내지는 불량국가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좀 더 평화지향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예로 중국은 책임대국으로서의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사회에서 저자세 외교를 수행해왔다. 도광양晦(韜光養晦)와 영불위두(永不為頭)로 대표되는 중국의 저자세 외교는 1990-1992년 기간 동안 덩샤오핑이 다양한 연설에서 주장했던 중국의 외교적 전략으로서 중국은 저자세 외교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국위협론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였다"⁵⁹⁾. 그러나 중국의 이런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따라서 중국은 자신을 책임대국으로 규정하면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좀 더 건설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학자들은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중국위협론을 반박하고, 중국의 책임대국론의 적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의 당세평(唐世平)⁶⁰⁾의 경우, 중국의 현실주의적 성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이 국제질서의 도전세력(revisionist power)이 아니라 세계질서 수호세력(status quo power)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중국위협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중국의 현실주의적 성향을 인정하면서도,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와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의 구분을 통하여 중국위협론을 반박하고 있다. 즉, 중국위협론자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공세적 현실주의로 파악하기 때문이며, 사실 중국의 현실주의는 이들의 시각과는 달리 방어적 현실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唐은 공세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의 구분을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에 대한 인식에서 찾고 있다. 즉 공세적 현실주의에서는 국가의 안보증진은 국력

58) 한석희, "중국의 부상과 책임대국론: 서구와 중국의 인식적 차이를 중심으로," 『국제정치』 제44집 (1)호 (2004), p. 198.

59) 叶自成, 『中国大战略』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 p. 126.

60) 唐世平, "中国的崛起与地区安全," 『当代亚太』 (2003), pp. 14-18.

의 신장과 동맹관계의 구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안보딜레마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반면, 방어적 현실주의에서는 안보딜레마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면서 안보딜레마가 국가의 안보불안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국력의 신장과 동맹관계의 구축을 국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주요 요소로 인정하면서도, 국가 간의 안보협력도 국가의 안보증진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요소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唐은 중국위협론자들은 공세적 현실주의에 기초하여 중국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현실주의는 방어적 현실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외적인 안보협력을 통하여 중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唐은 또한 국제정치의 주요 이론을 공세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 규정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연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안보는 국가 간의 안보협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안보체제(security institutions)에 의해서도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주제는 국제체제의 국가에 대한 역할이다.

국제체제는 범세계적인 규범과 원칙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고 조율하며, 국가 간의 정보교환을 증진시키고, 상호간의 활동을 감시하며, 국제체제의 규범과 원칙을 어기는 국가에 대한 다자간 또는 일방적 제재를 부여하는 것을 중요 인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은 국제체제에 의한 국가의 관리를 강조하고 국제체제의 관리에 의한 국가안보의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 후, 唐은 중국의 책임국가론의 성향을 안보적 현실주의에 근거를 두고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가미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자국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책임 내지는 책임대국에 대한 개념을 수립해가고 있다. 중국에서 책임이란 단어

를 뜻풀이해보면 임무(duty)와 부담(burden)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서 법률적 측면보다는 도덕적 측면에서 의무(obligation)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도덕적 측면의 책임이란 신세 또는 빚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책임의 개념을 근대역사에 대입시켜 구체화시키고 있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근대역사에서 서구중심의 국제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신세 또는 빚)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서구는 중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역사적 책임 또는 의무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자국의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 접목시키고 있다"⁶¹⁾. 다시 말해서 중국은 1842년 아편전쟁 이후의 1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서구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침탈과 오욕을 거론하면서 서구국가들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중국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그 책임감의 연장선에 있어서 서구는 중국의 국내문제에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서 국제규범 및 기준형성(rule making)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근대 이후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규범 및 기준 형성과정에 자국이 참여한 적이 없고 따라서 국제적 규범 및 기준이 항상 중국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규범 및 기준형성에의 참여를 책임대국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⁶²⁾. 또한 중국은 자국의 국내문제 해결을 강대국의 책임과 권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무력을 사용해서라고 대만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점과 필요하다면 정치적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중국의 대내적 안정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 중국이 행사해야 할 권리와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논리를 검토해 볼 때, 중국은 중국위협론을 반박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책임대국의 논리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⁶³⁾.

61) 한석희 (2001), p. 200.

62) 夏丽萍, "中国一个负责任的大国," 『当代亚太』 vol.10 No.26 (2001), pp. 17-25.



63) 한석희 (2001), p. 201.

V. 중국위협론과 중국의 현실

1.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발전

(1) 중국의 경제력발전

중국위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중국의 경제성장의 문제이다. 미국 CIA에서도 이러한 중국경제에 대해서 향후 15년간 중국이 7% 정도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2020년에 중국의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한 GDP 수준에 있어서 미국의 수준에 접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대한 무역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일부에서 '중국위협론'을 확산시키는 시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경제력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견해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 강국의 실력을 구비한 위협적인 존재라기보다, 오히려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는 대단히 불안정한 경제라는 비관적 평가도 있는 것이다⁶⁴⁾. 결국 중국의 경제성장이 위협으로 작용하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과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경제성장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중국위협론'을 평가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국의 경제적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서방세계의 전망에는 물론 중국의 위협적 잠재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그 자체로 미국과 서구의 경제적 패권에 위협의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자원, 일자리, 환경 등의 관련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심각한

64) 신호나, "중국의 대외정책과 동아시아의 평화: 중국위협론,"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7), p. 17.

위기와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중국위협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서방 세계가 숫자를 왜곡하거나 지나친 억측을 통해 중국의 힘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중국위협론자들은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최강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의 일부분만을 그것도 과장해서 얻어진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결론일 뿐이다. 예를 들면, 중국위협론자들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잠재력만을 이야기할 뿐이고 중국의 국내총생산에 있어서 아직 미국의 1/2(2012년 기준)에 불과하는 것이며 국민 1인당 소득 측면도 아직 세계100위 정도에 이르는 동시에, 1인당 수자원은 세계 평균의 1/4, 1인당 경작가능토지면적은 전 세계 평균의 40%, 1인당 석유, 가스, 구리, 알루미늄 자원은 세계평균의 각각 8.3, 4.1, 25.5, 9.7%에 불과하다는 사실로부터는 애써 눈을 돌린다⁶⁵⁾. 또한 하영선, 남궁곤⁶⁶⁾은 『변환의 세계정치와 한반도』 중에서는 2015년 세계 GDP 추정치를 보면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발원지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 81.8조 달러 중 18.3조 달러(2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미국의 1/2 수준인 9.4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2015년에도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에 따라잡지 못하다고 알게 될 수 있다. 중국이 계속 연 평균 7%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2020년 무렵에는 미중 양국의 경제 규모가 비슷해질 것이다. 하지만 규모면에서 두 나라의 경제가 대등한 수준이 된다 할지라도 구조면에서는 대등할 수가 없다. 중국은 광대한 농촌 지역이 아직도 저개발 상태인 탓으로 고 성장률을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2056년부터 2095년 사이의 어느 시점이 되기까지는 1인당 소득 면에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경제발전의 질적 수준을 헤아리는 데는 1인당 소득이 보다 정확한 척도가 된다. 아시아개발은행

65) 유종선 (2009), p. 34.

66) 하영선, 남궁곤, 『변환의 세계정치와 한반도』 (을유문화사, 2007), p. 20.

(Asian Development Bank, 1997)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소득이 2025년까지 미국의 38%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⁶⁷⁾. 그 정도만 되어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지만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여전히 까마득하다. 또한 중국이 발전을 이루는 동안 미국이 그대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세기 초 카이저의 독일이 영국을 능가하면서 보였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의 우위에 도전하는 상황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경제성장 추세에 대한 단선적 예측이나 추계만으로는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어느 나라든 경제 도약기 초기에 기술 도입으로 상당한 혜택을 볼 때는 손쉬운 성과에 매달리기 쉽다. 따라서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개발되면 대체로 성장률은 둔화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중국경제는 비능률적인 국영기업을 털어 버리는 과도기에 있는데다 금융제도가 취약하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러 가지 심각한 장애에 당면해 있다. 심화되는 불평등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이주 행렬,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사회 안전망, 부정부패, 부적절한 제도와 기구 등은 정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갖가지 규제가 경제성장의 장애가 되는 시대에 급증하는 정보교류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은 중국지도부에게 심각한 딜레마가 되고 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인 드와이트 퍼킨스(Dwight Perkins, 2000)는 '시장 개혁 과정의 초기에 거둔 성공은 상당 부분.....과업의 기본적인 단순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법치를 이루고 경제부문에 적절한 조직과 제도를 갖추는 과정은 몇 년이나 '몇 개월이 아닌, 수십 년에 걸쳐' 평가해야 할 대상이다. 사실 몇몇 논평가들은 부상하는 중국보다는 중국이 쓰러짐으로써 빚어질 혼란을 걱정하고 있다. 중국이 인구 증가와 엄청난 국내 이주 행렬, 기후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 내전 상황 등을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면 성격이 판이한 일련의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정치는 언제나 경제적 예측을 뒤엎을 만한 방법을 가지고

67) 조지프나이, 홍수원 옮김, 『제국의 패러독스』 (세종연구원, 2002), p. 50.

있다⁶⁸⁾).

특히, "중국의 경제는 기술발전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지나치게 투자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서구에서 개발된 기술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은 중국의 자립적인 기술발전을 저해해왔다. 유형자본은 동아시아 NIEs(newly industrializing economics) 경제발전의 동인이었다.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무려 65-85%에 이르는데, 그 다음 중요한 요소는 물론 노동이다. 반면, 일본을 제외하고 서방 선진국인 G-5의 경우 기술진보의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도는 평균 60%일 정도로 높았다. 유형자본의 기여도가 이 뒤를 잇고 있으며, 노동의 비중은 무시할 수준이었다. 일본은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바, 성장에서 기술진보의 공헌도는 서구보다는 낮은 45%정도였다. 유형자본의 공헌도(55%) 역시 기술진보의 그것보다는 높게 나온다. 이점은 오히려 동아시아 NIEs와 흡사할 정도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유형자본의 공헌도가 무려 95%였을 정도로 중국은 기술대신 유형자본에 과도한 의존을 해온 특징을 보여 왔다. 게다가 제품생산에 있어 차지하는 역할이 단순 조립 생산에 그쳐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⁶⁹⁾. 따라서 중국은 외국의 투자와 거대한 노동력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구가한 구조를 보여 왔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은 앞서 언급한 요소들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나친 노동력과 단순한 조립 생산 수준의 지속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중국의 국력에 대한 중국위협론자들과 비판론자들의 이런 상반된 주장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대한 시장에다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등 중국이 경제성장에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은 전 세계에서 여전히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데에는 안팎의 주장들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와 같은 빠른 경제성장을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68) 위의글, p. 51.

69) 이재연, "중국위협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2), pp. 50-51.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압도적이다. 경제발전의 단계를 봤을 때 한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처럼 중국도 역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중국이 경제발전의 모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무너질(breakdown) 가능성도 높고, 또한 세계경제에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환경악화, 자원부족, 많은 인구 등 중국의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비록 빠른 경제성장을 계속해서 전체적인 하드웨어(경제규모)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해도 국력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소프트파워(soft power)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⁷⁰⁾.

소프트파워이론을 제기한 사람인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2004)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의 쇠락과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논했다. 나이 교수는 미국의 쇠락을 전망하는 것은 더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학계에 만연한 일종의 유행과도 같은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절대적인 힘의 쇠퇴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국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국이 여전히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욱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그는 21세기는 매우 불평등한 권력 자원의 배분 속에서 시작된 시기라고 전제한 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를 구성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총생산의 1/4정도를 책임지고 있고 세계 군비지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와 교육 측면에서 가장 광범위한 소프트파워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중국의 부상과 상대적인 미국 국력의 변화는 상당부분 중국의 정치권력 변화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만일 정치적인 격변을 억제한다면 중국의 국가규모나 현재의 경제성장률에 비춰 중국이 미국과의 국력 격차를 줄일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평가이다⁷¹⁾.

70) 유종선 (2009), p. 35.

71) 이상현 (2011), p. 40.

많은 견해들을 종합할 때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과 어느 정도 대등한 지위를 얻기까지는 최소한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조지프 나이의 견해나 2050년이 되어도 중국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중간 정도의(medium-level) 개발국가 지위일 뿐"이라고 하는 정비젠(鄭必堅)⁷²⁾의 주장이 비교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까지도 중국의 국내나 세계 경제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 향후 1-20년 내에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 경제의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력이나 국력만을 가지고 한 나라가 도대체 위협적이나, 위협적이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이 된다고 해도 과거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임하면서 세력균형유지의 담보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러한 지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더욱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중국이 강대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안보적 위기상황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중 간의 대결 상황이 동북아에서 국가들 간의 위험한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고, 사실 이는 이미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석유, 식량 등 자원 획득을 위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전쟁' 수준으로 비화할 수도 있으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세계 환경에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⁷³⁾). 어떤 점에서는 이것은 중국의 국력이나 이의 전망보다 더 심각하고 급박한 안보적 위협요소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의 강대국이 될 것인가 라는 논쟁으로부터 중국 성장과정에 있어 많은 변수들과 안보적 상황으로 인해 눈을 돌리는 것이 좀 더

72) 鄭必堅博客, http://club.china.com/data/thread/1011/2748/35/96/9_1.html (검색일: 2013.8.8).

73) 유종선 (2009), p. 36.

건설적인 검토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중국의 군사력발전

두 번째는 중국의 군사비 지출과 군사력 증강추세를 살펴보도록 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대한 안보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긴박한 문제는 이것이 중국의 군사력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쌓인 엄청난 부를 군사력 강화에 투입하고 있다. 1990년 이후에 중국은 군사비를 연평균 10% 정도 늘려오고 있다. 그 결과는 15년 만에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10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공식발표에 따라 중국의 군사비 규모는 2007년에 약 460억 달러이다. 명목상 이는 미국의 6천억 달러에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중국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군사비에는 무기구매, 경찰관련 예산, 군사 R&D 같은, 서방에서 통상 군사비에 포함시키는 핵심적 요소들이 제외되어 있다. 여기에 낮은 물가로 인한 실제 구매력 증가를 감안한다면 중국의 실제 군사비는 정부 발표의 2-3배에 달한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이미 1천억 불을 넘어섰다. 미국 다음의 세계2위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2020년이 되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최대 연 3천억 불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는 미국의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결국 중국위협론자들의 주장은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미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수준을 크게 넘어 곧 미국에 육박하는 수준으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는 편리하게 조작된 숫자들만을 나열하여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군사비지출 규모는 현재 미국의 10%정도 밖에 못 미치고 있다. GDP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미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위협론자들은 산정한 중국의 전체 군사비지출 규모를 거론하

며 이를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과장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비지출 규모를 둘러싼 중국위협론자들과 비판론자들의 이 같은 논쟁은 어떤 점에서 '숫자놀이'의 전형과도 같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각자 자신에 유리한 숫자들만을, 그것도 임의로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⁷⁴⁾. 중국위협론자들이 주로 전체 군사비지출 규모와 증가 추세를 부각시키는데 반해 중국은 상대적인 1인당 군사비지출 규모와 GNP 대비 군사비지출 비율을 강조한다.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의 주장도 다 문제가 있다. 우선 "중국의 실질 군사비지출 규모에 대한 서방세계의 추정방식을 보면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액수보다 최소 150%에서 최대 300%까지를 늘려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정하는 기준이나 산정방식이 대단히 모호하고 임의적이다. 엄밀한 기준 없이 실질구매력 지수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미국 측 자료들을 보면 중국의 GNP 대비 군사비를 계산하면서 GNP는 공식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고 군사비는 실질구매력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수치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학의 기본조차도 무시한 '숫자조작'의 전형적인 예라고까지 할 수 있다. 중국의 주장 역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실질 군사비에 대한 서구의 추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주장 자체가 전혀 타당성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중국이 합리적인 설명과 객관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중국위협론자들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⁷⁵⁾.

양측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군사비지출 규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중국이 발표하는 군비지출 규모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항목들이 누락되어 있으며 실질구매력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중국의 실질적인 군사비 추정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중국의 실질적인 군사비

74) 위의 글, pp. 38-39.

75) 이재연 (2012), p. 53.

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최소한 50-100% 정도는 많을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군비지출 규모는 이미 일본을 넘어 미국 다음의 순위에 올라와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군비지출이 강대국 중에 가장 빠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미중 양국 간에 아직도 국방비 투입 면에서 큰 격차를 존재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경제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이것이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만은 없다. 중국이 GDP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특별히 올리지 않더라도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가 20-30년 내에 미국의 50% 수준에 이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군사비의 GDP 대비 비율은 아무리 높게 추정해도 1.5%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는 일본, 독일보다는 높지만 미국은 물론 러시아, 영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비정상적인 성장세를 보인다고 주장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4〉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비교

(단위:US\$, 10억 달러)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미국	국방비	281.4	335.7	417.4	455.3	478.2	528.7	547	607	661	698
	world share (%)	36	43	47	47	48	46	45	41.5	43	42.8
중국	국방비	27	31.1	32.8	35.4	41.0	49.5	58.3	84.9	100	119
	world share (%)	3	4	4	4	4	4	5	5.8	6.6	7.3

자료: SIPRI(2002-2010)각 연도별 통계.(이상현, P.35에서 재인용).

중국은 군사력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국위협론자들이 주장하는 군사력 강화의 모습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앞에 언급했듯이 중국은 최근에 꾸준히 국방예산 증가를 통해 과거보다 뚜렷한 양적 성장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무기수준이나 전략무기 규모, 국방비 등을 볼 때 앞으로 30-50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많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이 최근 많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10년 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제해권 척도인 해군 함정 총톤수(함정들의 배수량 총합)는 미해군이 312만1014t으로 중국을 포함해 2-14위인 국가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다. 한편 중국의 함정 총 톤수는 68만 톤에 불과하다. 또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과학기술을 미국과 비교할 때 재래식 무기분야는 30년, 핵무기는 20년, 우주항공 분야는 10-15년 정도 뒤지는 것으로 보며 당분간 미국과 격차를 크게 좁히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군사력 면에서 분명 중국은 경제발전을 통한 군사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전반적인 우세를 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무엇보다도 경제력의 열세로 인해 중국의 국방비지출은 미국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의 국방지출 누적에 있어서도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우세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소련처럼 국민총생산의 더 큰 비율을 국방 분야에 장기간 투입해 군사비 격차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군사우선 정책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만을 제고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⁷⁶⁾. 또한 중국인민대학 황다후이(黃大慧)⁷⁷⁾는 중국의 지난 20년간 국방비 증가 규모를 토대로 매년 상승폭을 15%로 설정할 경우 2020년에 2조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3000억 달러로 미국의 2001년 국방비

76)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2/2012010200089.html (검색일: 2013.8.21.).

77)黃大慧,中国人民大学, <http://sis.ruc.edu.cn/static/teachers/diplomacy/huangdahui.html> (검색일:2013.8.23).

3127억 달러에 비슷한 규모가 된다고 말한다. 이는 중국의 국방비가 현재의 추세대로 증가해도 미국의 국방비와는 무려 20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의 절대적 비교 역시 큰 의미가 없을 만큼 양국의 군사력 차이는 크다.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국방예산규모는 미국의 약 1/6의 규모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군사력 수준에서 중국의 '위협'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가? 여러 정보들을 종합할 때 "장거리 핵 타격 능력이 아직까지 크게 부족하다고 하는 점, 첨단 군사장비와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점, 원거리 해양 군사작전 능력 부재 등을 중국 군사력의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아직까지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러시아에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 인접국인 일본에 비해서도 별로 앞서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군사력 증강 추세가 지속될 경우 대략 2020년이 되면 중국은 세계최대의 전투 병력과 현대식 육상 전투장비, 1천 개 이상의 핵탄두와 수 백 기의 장거리미사일, 장거리 폭격기,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을 보유하여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 다음의 명실상부한 세계 군사강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전체적인 전력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적어도 수십 년 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⁷⁸⁾. 종합해서 보면 군사력 수준만 볼 때 당장은 물론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내에 중국이 미국의 패권위치에 전면적으로 도전할 수준에 이를 수가 없겠지만 지역적 차원에서는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의 발전과 국내문제

(1) 소수민족문제

78) 유종선 (2004), p. 41.

최근에 중국 지도자들은 고민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 중국소수민족들에 대한 정책이다. 중국은 한족을 포함하여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거주하는 지역과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중국국내의 소수민족문제는 또한 국제사회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인구 중에 소수민족이 8%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중국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족은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8%정도에 불과한 55개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중국 전체의 약 65%정도의 서부지역을 점하고 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중국 전체국토의 1/3을 점하고 있으며 해발 2000m 이상 되는 고지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 지역에서는 공업은 고사하고 농업조차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의 거주지는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곳들이 많다.

1949년 중국을 건국한 중국공산당은 "모든 민족의 통합과 평등, 그리고 안전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국경 부근에 위치한 내몽고, 신장 위구르, Ningxia의 회족, 시짱의 티베트족 및 동북의 조선족 등과 같은 소수민족들에 대해 분리 독립을 용인하지 않는 대신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가통합을 도모했다. 이들 지역에 중앙으로부터 한족 출신 당 간부를 파견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였고 한족을 대량으로 이주시켜 소수민족과의 동화를 진행시켜 온 것이다"⁷⁹⁾. 소수민족들은 서로 종교와 민족,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에서의 삶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수민족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중국 정부부터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끊임없이 분리 독립운동을 주장해왔으나 중국 정부에서는 이를 무력으로 저지하면서 한족과 소수민족간의 민족차별을 양산해 왔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의 독립

79) 정천구, "중국의 대외정책과 남북한 통일문제," 『통일전략』 제10권 제(2)호 (2010), pp. 198-200.

운동을 무력으로 저지하는 이유는 소수민족 중에 한 민족이라도 독립하게 되었을 경우 이는 다른 민족의 분리 독립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이다.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중국 국토전체의 2/3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국경선을 접근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소수민족의 독립은 대만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실지(失地)를 회복하는데 일국양제 정책으로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을 회복하였고 마지막 실지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주권을 흡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이 분리 독립하였을 경우 대만도 분리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분리 독립을 저지하고 있다. 대만은 2000-2008년까지 민진당 집권 하에서 끊임없이 대만독립을 주장하여 왔으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독립을 무력을 통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것이 사실이다. 대만의 분리 독립은 타 민족의 분리 독립과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독립을 위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4대 현대화 과정에서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08년 국민당 정권으로 다시 정권이 회복된 이후에는 대만과의 화해정책과 경제적인 협력정책을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안간의 ECFA 협정 체결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양보와 대만의 의사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협정 체결에 동의한 것도 대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와 잠재력이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소수민족 정책의 가장 고민거리는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이 단순히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으로 연계되어 해석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분리 독립의 저지를 민주화를 방해하는 독재정권의 횡포로 해석되어 지면서 이슬람 지역의 채스민 운동과 같은 것으로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이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국가로 치부되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빌미와 수단을 제공하는 측면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불식과 홍보가 동시에 같이 전개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⁸⁰⁾.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은 중국 내부문제로 중국의 규정과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권 탄압이라는 문제로 비화하여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의 빠른 성장을 견제하려는 국가들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이라는 문제와 연결하면서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리더위치를 확보하여 진정한 중국시대를 열리기 위해서 상술한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문제와 민주화라는 것은 중국 지도부가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도 필수적이다.

(2)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문제

중국 지도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는 현재 중국의 발전이 전반적인 발전이 아니라 일부분의 발전이며, 이를 밑바탕으로 한 중국 전반을 평가하고 있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즉, 통계수치를 통해서 보는 중국의 발전과 겉으로 나타나 있는 중국의 성장은 한쪽을 중심으로 하여 동부 연안지방의 발전에 국한되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 동력을 축적하여 온

80) 박광득 (2011), pp. 298-299.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과 성장의 혜택은 동북연안 지역에 한정된 발전이며, 특혜를 수혜한 것도 한족 중심 사회에 국한되어 나타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이 고민하고 있는 양극화는 대체로 4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빈부간의 소득격차, 도농 간의 개발격차, 지역 간의 성장격차, 민족 간의 발전격차이다"⁸¹⁾. 앞에서 언급한 4가지 격차는 동부지방과 서부지방 간의 격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부지방과 서부지방 간의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심각해진다는 것이 현 중국 지도부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부지역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격차는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발전과 성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중국은 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농민들의 가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중 6억 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미만의 벌이로 연명하고 있고, 4억 4000만 명은 6달러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구 13억 명 중 10억 명이 아프리카와 같은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⁸²⁾.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중국 전체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약 6,000만 명의 부유층을 상대로 한 평가이다. 이들은 일 년 내에 2만 달러의 고소득을 올리며 서구세계의 부유층과 거의 다름없는 삶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대표로 전체의 중국을 평가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방문하러 가는 사람들은 이 부유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중국을 평가하고 중국에서 통계하는 수치를 근거로 중국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국 당국은 동부와 서부의 여러 가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을 강구한 것이 1999년부터 시작한 서부대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서부 대 개발은 덩샤오핑의 선부

81) 위의 글, p. 301.

82) "중국의 10억 명이 극빈층 폭발할 날 너지 않아," 『조선일보』 (2011.5.28). C3.

론(先富論)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동부 연안의 발전 경험과 부를 가지고 서부지역을 부유하게 만들자는 공부론(共富論)이라고 볼 수 있다"83).

그러나 지금까지의 서부대개발의 진도를 보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서부지역에 발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부와 서부지역 주민들은 서부 대 개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공감대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동부지역 사람들은 서부 대 개발이 지역차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동부지역에서 창출한 부를 그대로 동부지역에 투자하지 않고 서부지역에다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서부지역 사람들은 서부 대 개발은 서부지역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서부지역의 생태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서 결국 동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혹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발전에 있어 나타나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문제가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또한 오늘날 중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의 관리가 부정에 연루되어 부패한 정도가 심각하다면, 그 국가나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중국에서 관리가 부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중국의 국가 권력이 중국공산당에 집중된 절대 권력이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중국의 체제는 일당지배체제이다. 중국공산당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 받고 있고, 근본적으로 국민의 참정권도 부여되지 않고 공산당이 국가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행사한다.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권력의 고도집중은 과두정치를 형성시켰으며 제도의 구

83) 최유식, "선부론과 공부론," 『조선일보』 (2011.9.28), C2.

속성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다.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고 있고 권력이 법보다 우위에 군림하고 있다. 법적 체계의 미비, 권력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장치의 결여, 사법의 비독립성 등은 결국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도모 등 부정적 현상을 만연시키게 된 것이다. 중국 사람들과 외국 사업가와의 거래는 주로 권력의 관계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뇌물과 변칙을 조장함으로써 기회비용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패는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에 해를 끼치고 정치적 불안의 근원이 된다. 농민의 소요는 1990년 이래 계속되고 있다⁸⁴⁾. 이유는 지방 관리의 부패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관리의 부정부패행위는 시장체제의 확립 등 경제개혁을 방해하기도 하다. 따라서 권력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이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득할 수 있으나, 권력과 무관한 노동자 농민 계급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깨끗한 경제 환경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후진타오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고⁸⁵⁾, 또한 시진핑 체제가 들어와서 후진타오시대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부패를 숙청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지만 부패의 정도가 지도부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중국인들의 관시(关系)문화 때문에 부정부패의 완전한 척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상술한 두 가지 문제의 해결여부에 따라서 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3. 중국의 화평발전전략

화평발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화평굴기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화평굴기라는 개념은 정비젠(鄭必堅)이 2003년11월3일에 보아오 아시아포럼(博鰲亞洲論壇)에서 처음 제기하였다. 그는 중국정부로부터 인민폐(人民幣) 200만 위안의 경비원조를 받아 중앙당교를 중심으로 20

84) 이재연 (2012), p. 66.

85) 박광득 (2011), pp. 302-303.

여명의 연구위원을 조직하여 '화평굴기'라는 개념의 이론적인 작업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정비젠은 일찍이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집필하였고, 후진타오주석이 중앙당교 교장직을 역임할 때 부교장직을 맡아 현재 북경의 중요한 싱크탱크 중 한 명이자 후진타오의 주요 참모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의 발언은 상당한 정책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였다"⁸⁶⁾. 게다가 2003년 말에 그는 '화평굴기'라는 개념을 소개한 후에, 제4세대 지도부가 공식자리에서 계속 '화평굴기'를 언급하여, 중국의 국내외 매스컴도 '화평굴기'는 1990년대부터 견지해 오던 '도광양회(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為)'의 전략과는 달라 제4세대 신지도부가 취한 새로운 전략인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화평굴기론은 사실 "국내외 매스컴이 지적한 대로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중국의 양적, 질적 발전을 통한 '부상'에 대한 학술연구는 이미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주기이론(Long Cycle Theory)'이나 '세력전이이론(The Power Transition)'을 근거로 역사적으로 현 국제질서에 도전했던 국가들은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새롭게 등장한 세계적 차원의 강대국은 모두 현 패권국의 협력 파트너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학술 연구들은 곧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초기연구들이다"⁸⁷⁾. 또한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부상할 수 있었던 국제환경에 대한 연구와 중국이 존재하고 있는 국제환경을 평가하는 작업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다극화연구나 대국외교연구 역시 중국의 부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스스로 평화애호 국가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그 동안 평화적 부상이라는 의미의 화평굴기론은 지도부 차원의 공식담화에서 정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뿐이다.

어쩌면 중국사람들에게 중국의 부상 혹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오히려

86) 江苏桥网, <http://www.jsqw.com/2004-07-14/105/2927.html> (검색일: 2013.8.25).

87) 时殷弘, "国际政治的世纪性规律及其对中国的启示," 『战略与管理』 第5期 (1995), pp. 1-3.

려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⁸⁸⁾. 사실은 중국의 성장과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하는 '굴기'라는 개념은 서구의 일부 학자와 언론들이 '중국위협론' '중국붕괴론', 및 '중국기회론' 등의 개념을 먼저 제기하여 유행시켰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중국내부와 달랐지만 그 개념은 중국에 소개되었고, 앞으로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서구의 해석을 받아들여, 중국 국내에서도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중언어가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혹은 학자들 사이에서, 심지어 학술저작에서도 '굴기'는 국가적 목표의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굴기란 개념은 발전, 부흥, 현대화 과정, 비상, 현저한 상승 등과 비슷한 개념이므로, 중국의 굴기는 엄격하게 말해 단지 형상화된 화법이지 명확하고 특수한 정의는 없다는 분석처럼 중국인들에게 중국의 굴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 '화평굴기' 개념을 공식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전략으로 격상시키고자 했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다⁸⁹⁾". 2003년 11월3일에 보아오 포럼에서 정비젠이 '화평굴기'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이후 원자바오총리가 12월10일에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12월26일에 마오쩌둥 탄생 110주년의 기념좌담회에서, 외교부 부장인 리자오싱(李肇星)은 2004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의 기자회견에서 각각 언급한 적이 있었다. 정비젠과 지도부가 위의 공식담화에서 강조한 '화평굴기'론은 다음의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부상은 역사적 선례와는 다르게 새로운 것이라는 점이다. 정비젠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라는 새로운 길과 아시아의 미래'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새로운 길'로 명명하였고, 그 이유를 중국은 경제세계화에 적극 참여하여 이익은 취하고 손해를 피하는 방법을 활용할 것이며, 자주독립적인 발전방법을 통해 부상할 것이고, 부상 이후의 중국은 평화를 수호하며 결코 패권을 쟁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88) 牛军, "中国崛起:梦想与现实 之间的思考," 『国际经济评论』第11,12期(2003), p. 21.

89)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http://www.fmprc.gov.cn/chn/wjb/wjbz/zyhd/t71602.htm>(검색일: 2013.8.25).

이라고 부연하였다. 그는 또 중국은 향후 평화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아시아 기타 국가들의 발전과 번영,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는 중국 속담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공언하였다⁹⁰⁾.

다음으로, 중국은 '화평굴기'를 하기 위해서 원자바오 총리는 다음과 같은 5대 핵심을 소개했다. "첫째, 중국의 부상은 세계평화라는 좋은 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의 발전은 세계평화를 수호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부상은 광활한 국내시장과 노동력, 축적된 자본 등 중국자체의 역량에 의존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부상은 세계와 동떨어질 수 없으므로, 개혁개방 정책을 견지하고 평등호혜 원칙아래 세계 각국과 경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부상은 몇 세대에 걸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부상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화평굴기'란 중국은 현재에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성해진 이후에도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의 부상은 오히려 주변국가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세계평화와 발전에 대한 공헌이라는 것이다"⁹¹⁾. 이처럼 '화평굴기' 개념에 대해 현 중국의 중요한 싱크탱크의 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비젠과 제4세대 지도부가 반복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중국 국내 여론들도 화평굴기론을 신지도부가 채택한 새로운 대외전략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중국의 관영 일간지 인민일보도 화평굴기론이 중국의 위대한 민족 부흥의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국제사회의 권력구조를 더욱 균형 있게 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동시에 국제정치 역사에 새로운 범례를 제공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국가 간의 충돌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⁹²⁾. 이렇게 지도부만이 아니라 언론매체들도 반복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역사적인 예와 달리 새

90) 郑必坚中国和平崛起要把握好二十年三大机遇,

http://news.southcn.com/gdnews/zgmzs/node_266441.htm (검색일: 2013.8.25).

91) 김애경,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국제정치논단』 제45집 (4)호 (2005), p. 218.

92) 新华网, "伟大民族复兴的道路选择—论中国的和平崛起," (2004.2.17).

로운 것임을 강조하고, 공식적으로 그동안 중국 부상의 결과를 우려하고 있는 외부의 평가들을 반박하는 화평굴기론은 4세대 지도부가 세운 새로운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 듯했다.

그러나 "화평굴기라는 표현은 중국보다는 외국에서 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 내의 강경파들은 새로운 슬로건이 타이완문제를 처리하거나 다른 중요한 국익을 주장하는 일에서 물리적 수단을 자제하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일부는 중국이 떠오르는 세력이라는 주장은 겸손하지 못하며 국가적 우월주의를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반대는 굴기라는 단어가 다른 나라의 '의심과 경계심을 유발한다'고 보는 군인, 외교관, 싱크탱크의 분석가들로부터 나왔다. 결국 '화평굴기'라는 표현은 첫 공연을 마친 다음 공식적인 어휘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화평발전'이라는, 덩샤오핑이 집권하던 1980년대의 미온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⁹³⁾.

화평굴기가 처음 제기된 이유는 역시 미국이 확대시키고 있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중국의 대외전략으로서 화평굴기에 찬성하는 대부분 학자들은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부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과 대결을 최소화하면서 협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는 중국의 노력을 주장하고 있다. "화평굴기론의 쇠퇴와 화평발전론으로의 대체로부터 기존의 판단과 전략을 견지하거나 중도적 시각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아직까지는 중국 학계의 주류임을 알 수 있다. '굴기'라는 표현을 대체한 '발전'의 개념은 그동안 중국이 견지해온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 관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 뉘앙스 또한 보다 중도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1990년대 말 이후 학자들의 논쟁에 대한 중국정부의 수용 혹은 결정과도 관련이 있다. 즉 1990년대 말 이후 중국학자들은 국제환경을 여전히 평화와 발전의 추세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시대 관에 대한 논쟁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국가가 되어야

93) 애런 프리드버그, 안세민 옮김, 『패권경쟁, 중국과 미국, 누가 아시아를 지배할까』 (까치, 2012), pp. 176-177.

한다는 책임대국 논쟁을 전개하였다"⁹⁴⁾.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 또한 지속적으로 온건하고 부드러운 중국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과 일부 학자들의 분석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 중국지도부가 급진적으로 노선전환을 한 이후에 견뎌내야 한다는 대내외적인 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94) 김애경 (2005), p. 227.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처해 있는 현실에 비추어 중국위협론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와 군사적인 성장을 보고 이를 위협적으로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파악하고 도출된 결론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2025년을 전후하여 중국은 현 패권을 위협할 만큼 위협적이지는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중국은 자신만의 하늘아래 진정한 세계라는 ‘천하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과 문화를 배척하며 자신의 문화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중화사상’이 민족정서의 기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천하사상’과 ‘중화사상’은 중국 지도자들은 민족주의로 중국인을 단합시키고, 때로는 서구에 대항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부분 소수 민족들의 분리운동으로 인해서 민족적으로 구성된 ‘민족주의’의 발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한족이라는 동질감보다는 소수민족의 분리운동에 더 예민해져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과거 중국은 개인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했던 권위주의의 의사결정체제로 당, 정, 군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정립하였는데, 하지만 한 개인의 영향력보다 이러한 조직의 영향력은 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외사영도소조’(外事領導小組) 등 지도자들 간의 협의를 중요시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집단집권체제에서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제도화시켰으며 지도부들의 전문성을 중시하고, 권력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현상유지(Status-quo)’를 추구하는 등 점차 온건화되고 제도화되어 가는 특징을 보여 준다. 또한 중국의 대외발전전략-화평발전전략을 살펴보더라도 중국은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자 하는 패권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조만간 중국이 미국의 패권이 대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쇠락은

사실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힘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쇠퇴로 향후 수십 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조지프 나이도 중국이 미국과의 국력 격차를 줄일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위협론이 전혀 근거나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현실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이 지금의 세력 판도와 국제정치의 권력구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를 타파하는 데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힘만 갖추게 된다면 중국은 언제든지 현상타파의 군사 모험주의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또한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중국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이나 가까운 미래를 볼 때 중국위협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왜곡과 오해에서 비롯된 과장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아시아 주변국들의 좋은 이웃으로 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수민족문제의 평화적 해결, 환경문제 및 해적퇴치 등 국제기구에 적극적 협조,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인도적인 경제지원 등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자료

강명세.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질서의 재정립." 『세종정책연구』, (2012).

김유리. "미국 내 중국연구의 변화를 통해 본 중국위협론 논의의 재고찰." 『동아연구』 (2012).

김애경.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국제정치논담』 제45집 4호, (2005).

김태호. 『중국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나남, 2008.

박광득. "굴기의 중국이 모색하는 변화와 한계." 『정치, 정보연구』 제14권 2호, (2011).

박병광.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미래상에 대한 평가."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2호, (2004).

방수옥. 『중국외 외교정책과 한중관계』 인간사랑, 2004.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국제정치』, (2002).

신옥희. "미중일 관계의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통합적 이론으로서 위협균형/위협전이론." 『아시아리뷰』 제2권 제1호, (2012).

신효나. "중국의 대외정책과 동아시아의 평화: 중국위협론."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7).

엄상윤.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변화." 이상현(편),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 안보 지도』, 세종연구소, 2011.

우철구, 박건영.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6.

유종선. "중국위협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51집, (2009).

이경훈. "중국위협론의 타당성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헤게모니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8).

이남주. "미국에서 '중국위협론'의 부상과 변화." 『한중수교 10년』, (2002).

이동률. "한중 정치관계의 쟁점과 과제." 전성홍, 이종화(편), 『중국의 부상』 서울: 오름, 2008.

이상현.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 안보지도』 세종연구소, 2011.

이정태. "후진타오 정부의 신국가 전략." 『대한정치학회보』 Vol. 13 No. 1, (2005).

이재연. "중국위협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2).

애런 프리드버그. 『패권경쟁, 중국과 미국, 누가 아시아를 지배할까』 까치, 2012.

전성홍, 이종화. 『중국의 부상』 서울: 오름, 2008.

정영록. 『중국의 경제개혁 평가』 현대중국연구, 2005.

정재호.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론』 서울: 나남출판, 1999.

정천구. "중국의 대외정책과 남북한 통일문제." 『통일전략』 제10권 제2호, (2010).

조지프나이, 홍수원 옮김. 『제국의 패러독스』 세종연구원, 2002

진희연. "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외교정책." 『중소연구』, (2004).

찰스 W. 케글리, Jr./오영달, 조한승, 황기식 옮김. 『세계정치론, 경향과 변화』 서울: 한티미 디어, 2010.

최유식. "선부론과 공부론." 『조선일보』, (2011).

하영선, 남궁곤. 『변환의 세계정치와 한반도』 을유문화사, 2007.

한석희.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시각."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3호, (2001).

한석희. "중국의 부상과 책임대국론: 서구와 중국의 인식적 차이를 중심으로." 『국제정치』 제44집 1호, (2004).

중국자료

方觉. "从廉洁神话回到腐败现实." 『方觉专栏』, (2007).

胡鞍钢. "畅想中国梦." 『光明日报』, (2011).

李小华. "解析中国威胁论与中国崩溃论的神话." 『当代亚太』, (1999).

叶自成. 『中国大战略』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

唐世平. "中国的崛起与地区安全." 『当代亚太』, (2003).

夏丽萍. "中国一个负责任的大国." 『当代亚太』, (2001).

牛军. "中国崛起: 梦想与现实之间的思考." 『国际经济评论』 第11,12期, (2003).

사이트

중국광주지역정보가이드, <http://cafe.naver.com/qingbao/729>

<http://strongestchina.blog.163.com/blog/static/4921337201371311114278/>

해피캠퍼스, <http://mybox.happycampus.com/click4001/542855>

郑必坚微博, http://club.china.com/data/thread/1011/2748/35/96/9_1.html

<http://sis.ruc.edu.cn/static/teachers/diplomacy/huangdahui.html>

江苏桥网, <http://www.jsqw.com/2004-07-14/105/2927.html>

<http://www.fmprc.gov.cn/chn/wjb/wjbz/zyhd/t71602.htm>

郑必坚博客, http://news.southcn.com/gdnews/zgmzs/node_266441.htm